



# 사탕수수에겐 참 미안한 이야기

사탕수수야, 건강한 땅에서 햇빛 먹고 바람 마시며 자란  
 네가 내 원료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  
 내 감칠맛은 너를 꼬박 마흔 시간 동안 발효해서  
 얻은 맛이라는 것도 말이지. 그래, 생각이라는 걸 쉽게  
 바꿀 순 없겠지. 하지만 난 믿어. 맛을 위해, 건강을 위해  
 진심을 다하다 보면 오해는 조금씩 풀릴 거라고.  
 더 많은 식탁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야.

사탕수수를 발효하여 만든 발효미원



**커버스토리**  
경실련은 2018년 다섯 가지 핵심사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개헌, 재벌, 보유세, 청년, 지방선거입니다.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하나씩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희망의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8, 희망하다 〉



경실련 |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림 목영주 중앙위원회의장 이의영 상임집행위원장 채원호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윤은주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발행 2018년 4월 3일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omepage : http://www.ccej.or.kr

# CONTENTS

## 동승동 칼럼

6 토지공개념 / 윤순철

## 30주년을 바라보다

8 경실련이 묻다! 김성훈 前공동대표 인터뷰 / 윤은주

## 인사말

13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목영주 공동대표 / 채원호 상임위원장

## 2018, 희망하다

- 18 [개헌] 대통령발의 개헌안, 제왕이 살아 있다 / 이현환
- 20 [재벌] 더 이상 재벌을 위한 나라는 없어야 한다 / 이성윤
- 22 [보유세]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 / 오세형
- 25 [청년] 애달픈 청년, 지적이 아닌 응원이 필요한 때 / 최예지
- 28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 허훈

## 시사포커스

- 32 ① 판교 입주10년, 제2강남은 됐지만 집값안정에는 실패했다 / 김성달
- 37 ② 정부가 메르스 피해 배상하라! / 남은경
- 40 ③ 그 많은 GMO는 누가 다 먹었을까? / 박성용
- 42 ④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봄바람이 되어주길 / 조성훈
- 45 ⑤ 공수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국회는 지금? / 정택수



**08** 30주년을 바라보다  
김성훈 前공동대표  
인터뷰



**40** 시사포커스  
그 많은 GMO  
누가 다 먹었을까?

## 현장스케치

47 제15기 1차 중앙위원회 "대구 비술산 아래서 마음을 나누다" / 윤은주

## 지역이야기

50 4·3 70주년 제주 시민활동 / 김신숙

## 우리들 이야기

- 53 ① [동지내몰림 시리즈2] 노량진 '카페 7그램' 인터뷰 / 윤은주
- 58 ② 동계 인턴! 그들이 말하는 인턴이야기 / 김연주, 김혜빈
- 61 ③ 문화산책 - 아버지 축출의 시대 / 정호철

##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공

- 64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 65 경실련 일일보고
- 68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47** 현장스케치  
제15기 1차 중앙위원회



**53** 우리들 이야기  
동지내몰림 - 노량진 카페7그램  
인터뷰

## 토지공개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7월 8일 500여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발기인대회를 시발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된 발기선언문에서 6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둘째,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셋째,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

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여섯째,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 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불로소득의 척결, 경제적 기회균등의 실현, 시장경제의 결함 시정, 토지투기의 배격 등이 경실련 출범 초기의 실천과제였다. 이것을 보면 한국경제의 주요모순이 생산과정 내에서보다 오히려 생산과정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출범초기 경실련의 인식이었다. 한국자본주의의 위기가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의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경실련 운동이 출범한 것이다.

경실련의 첫 운동은 부동산투기의 근절에서 출발하여 세입자들과 도시빈민들의 주거안정대책 마련으로 이어졌다. 경실련의 부동산근절 운동은 곧바로 지난 30여 년간의 관치경제하에서 누적되어온 모든 경제불의와 불합리한 질서를 개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한국은행의 독립, 금융실명제 실시, 정경유착의 척결, 불로소득의 척결을 위한 세제개혁,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해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마련, UR대응 및 우리농업살리기 등 현재까지 경실련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의 골격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비교적 긴 이름은 준비모임에서의 오랜 논쟁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논쟁의 초점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운동의 목표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운동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였다. 처음에는 '부동산투기와 싸우는 시민의 모임'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부동산투기는 경실련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중의 하나일 뿐, 새로운 운동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목표로서는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채택되지 않았다.

많은 논의를 거쳐 경제정의가 운동의 목표로 채택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가장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불의라고 판단했으며, 또한 경제분야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당시 주로 정치적 문제만을 다루던 다른 사회단체와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고, 참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운동단체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경실련은 90년 하반기부터 공평과세확립을 위한 세제개혁 캠페인을 전개했다. 자산보유자 및 불로소득자를 우대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경제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강화는 그대로 둔 채 봉급생활자간의 조세격차를 축소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미봉적인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고, 여론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국회 입법활동 및 시민대회 개최 등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실련 세제개혁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투기의 근절을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기업보유토지의 업무용/비업무용 구분을 철폐하며,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는 등 토지관련 세제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공평과세의 전제인 금융실명제 실시 및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간접세의 인하, 법인세 인하 등이 있다. ☺☺☺



# [인터뷰] 경실련이 묻다! “김성훈 前공동대표”

정리 :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경실련이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부터 30주년을 준비하며 그간의 경실련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30주년을 바라보며 경실련이 만나야 할 분들을 한분씩 찾아뵙고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담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로 1989년

창립 당시부터 함께 하시고 토지공개념, 재벌 개혁, 농업개혁, 통일운동을 활발히 하시다가 최근에는 소비자정의센터에서 반GMO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성훈 前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

**Q. 경실련 창립 당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다면?**

**A.** 89년 당시 사람들이 지금은 경실련에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 같아요.

7월에 발족해서 11월에 정식으로 사회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저도 7월에는 없었고, 11월부터 함께 했어요. 종로5가 다락방 시절 그때 생각하니 교수였어도 참 순진했었어요. 활동가들하고도 완전히 동지애, 아버지와 아들같은 사이로 지냈지요.

경실련은 크게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라는 두 뼈로 시작했어요.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 사회를 보면 후퇴하거나 모자란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Q. 말씀 꺼내주신 김에 경실련의 30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토지공개념이 안 되는 바람에 농지가 다시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됐어요. 부재의 지주, 도시자본 투기자본의 먹이가 됐어요. 경실련 30년 동안에 금융실명제, 한국은행 독립이 이뤄졌지만 재벌개혁은 이제는 삼성공화국, 현대공화국으로 발전했어요. 더 나빠졌어요. 전형적인 예가 이재용 부회장을 무죄 석방한



부장판사예요. 다 삼성장학생이에요. 삼성장학생이 아닌 정부관리, 삼성장학생이 아닌 사법부 판검사, 삼성장학생이 아닌 교수, 학자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 당시 내세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2년으로 늘린 것과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그래도 독립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경실련 모토가 ‘일한만큼 대접받자’인데 노동자, 농민들은 대접을 못 받고 재벌들 돈 있는 기득권층만 이익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토지공개념은 오히려 1949년 농지개혁 당시 처럼 소작화가 만연해졌어요. 헌법에도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소작은 금지했는데 위장

된 소작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농지의 반 이상은 소작이고, 이름이야 임차농, 위탁경영 바뀌어있지만 눈감고 아웅하는 거죠. 경실련이 더 치밀하지 못했다고 봐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니라,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경실련도 자유롭지 못해요. 코포라토크라시에서 경실련이 살아남은 데는 성공했어도 경실련의 출발인 소위 시대정신을 실현시키는데는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Q. 어떻게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태어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농(農)하고는 펠레야 떨 수 없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3학년때부터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농촌을 살린다, 농민을 살린다는 것은 약한 사람을, 취약한 산업을 살리자는 것이에요. 항상 약한 생명이 있는 곳, 농(農)은 바로 생(生)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 취약한 곳, 취약한 지역, 취약한 산업, 취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새 빛과 새 열(정신)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경실련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농업지킴이 운동을 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농업지킴이운동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위기감을 느끼고 농촌, 농민운동 살리자고 전국단위로 시작할 때 경실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실련에서 농업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반 우루과이라운드 투쟁, 우리

농업지킴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북한 통일은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해서 경실련에 통일협회가 생겼죠. 통일협회에서 창립을 도와줬던 우리 민족서로돕기에서 북한을 12번 갔었어요. 북한에서 농사 실험도 했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대표 하라고 해서 공동대표도 했었어요.

**Q. 김대중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2년 6개월 하셨었는데, 시민운동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르셨나요?**

A. 시민운동하면서 언론에 매일 나오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유심히 봤던 모양이에요. 그 때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장 할 때인데,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전화 받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무슨 장관인줄도 모르고 올라가서

임명장 받고 농림부장관인 줄 알았어요.

가서 저는 시민운동을 그대로 했어요. 한 건 똑같지만 훨씬 편해요. 예산 있지, 직원들 무조건 명령 따르지... 경실련에서 할 때는 일일이 설득해야 하고 반대하는 집단들 만나서 설득하고, 돈도 이곳 저곳 얻으러 다녀야 하는데, 악만 제대로 쓰면 기재부에서 예산 따다니니까 경실련 대표보다 몇 배 쉽더라고요.

가서 협동조합 개혁, 농조개혁(수세폐지), 유기농 원년 선포, 농촌 정보화 등 네 가지 일을 끝내고 나서는 사직서 내고 나왔어요. 벼슬 자리에 나아갈 때는 그만둘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 할 일 하고 끝났다 생각해서 물러나고 바로 캐나다로 갔었지요. 2년 6개월간 경실련에서 파견한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일했어요.

**Q. 북한 다녀오신 이야기와 통일운동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A. 북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역사,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마다 자기나라 체제가 있고, 다름은 인정해야죠. 왜 꼭 대한민국같은 신자유주의 자본가가 지배하는 이런 자본주의가 돼야 한다는 법이 없거든요. 자본주의도 결합투성인데, 체제의 다름만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체제의 다름만 인정하고,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하며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북에도 이익이

되는 일부러 하지는 거예요. 예컨대, 북한의 바닷가들이 우리보다 덜 오염 됐거든요. 거기에 우리 자본과 기술로 양식장 만들어서 해외 나가서 팔건 우리 시장에 팔건 해서 이익금을 반반 나눠 갖는 거죠. 우리나라 메밀 부족해서 수입해 먹거든요, 북한에 메밀 심어주고 수확해서 이익 나눠갖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돼지 새끼들 가져가서 거기서 키워서 나눈다든지 먼저 서로 이익이 되는 일부러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에 이익이 되고 우리는 손해가 없는 것을 해서 신뢰를 쌓아야 해요. 우리는 남아도는 식량과 비료, 부족한 북한에 나눠 주면 됩니다.

금강산에 내가 심은 나무, 개성공단에 심은 나무들, 지금쯤 많이 자랐을텐데 죽기 전에 그거 보는 게 소원이예요. 금강산 열리기만 하면 첫 번째로 갈려고 해요.

**Q. 최근 근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책을 쓰고 있어요. ‘밥이 민주주의다’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밥이 완전히 다국적 상업자본의 먹이가 돼가지고 안전한 먹거리가 아니라 유전자를 조작한 GMO라든가 유해색소나 유해첨가물이 들어간 입에 달콤한 눈에 보기 좋은 음식이 우리의 신체를 좀 먹고 있어가지고 병들어 가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식품산업협회라는 데가, 식약처가 GMO보급의 선봉에서 서서 GMO보급의 앞잡이가 되어 있어요. 생산자가 ‘내 것은



GMO가 아닙니다' 하는 표시하면 잡아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품이 GMO가 들어있다고 하는 완전표시제를 못하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내 것은 GMO가 아닙니다'는 표시도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디있냐고요. 내가 생산한 콩, 두부에 GMO가 안 들어갔습니다 해서 잡혀간 사례가 있어요.

일찍이 세종대왕도 “식위민천(食爲民天)”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먹거리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고쳐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다. 따라서 밥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Q. 마지막으로 경실련이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경실련 30주년을 바라보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토지공개념 확립하는 일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일은 영원히 경실련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경실련이 출범했던 당위성, 이유가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할 것이냐? 점점 돈과 권력의 장학생이 되어가는 전문가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상근활동가들이 전문가가 돼서 이제는 전문가들을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경실련은 재창립선언을 해야 한다고 봐요. 경실련이 출발했을 때 시대상황이 결코 더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경실련이 초심을 다시 살려서 재창립 선언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30주년을 맞아 경실련이 재창립한다는 정신으로 재창립 선언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공동대표 인사말〉

# 한국사회 개혁과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권영준 공동대표  
ykwon@khu.ac.kr

국내 최대의 경제적 국난이었던 IMF 외환위기를 당하면서 정부와 제도권 리더들 및 지식인들만 믿고 있다가는 나라가 무슨 일을 당할 지도 모르겠다는 엄청난 위기감과 자괴감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젊어서부터 존경하던 강철규 교수님과 이근식 교수님 등으로 상징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경제정의실천을 위한 사회개혁의 빛이요 통로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족한 자가 금융개혁위원장, 정책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장 및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도록 기회를 주신 경실련 동지들이 이제는 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공동대표를 맡겨주셔서 너무도 큰 영광이지만, 참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세월의 굴레가 60 중반을 넘는 저에게 인생의 마지막 소명을 주신 것으로 명심하고, 한국사회 개혁과 경제정의실천을 통한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경실련을 전심전력하여 섬기겠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 30년 동안 (특히 지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정치민주화는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이제는 규모의 경제라는 이름으로 개혁의 대상이고 경제력집중 폐단의 원흉인 재벌체제를 옹호하고 스스로 굴종하는 집단들이 너무나 많아진 현실을 보면서, 경실련이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져봅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제반 헌법적 가치기반을 마련하는 헌법개정엔 말할 것도 없고, 토지공개념 확산과 실효화를 위한 입법활동, 기득권집단 중심의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틀을 바꾸는 어렵고도 지난한 작업 또한 경실련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하여 다 같이 더 잘 사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경실련이 매진하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공동대표 인사말>

# 경실련 같은 조직이 있다는 것은 축복



정미화 공동대표 ns1110@hanmail.net

1989년 9월경에 농지보전을 위한 입법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실련을 방문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9년이 흘렀습니다. 당시의 시민사회는 정치권의 분열로 힘들게 쟁취한 1987년 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고 나면 치솟는 부동산과 생필품 가격으로 인해 서민 생활의 불안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국력을 집결하였던 전년도에 올림픽은 그해 봄에 있었던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으로 인하여 강화된 공안정국 때문에 그 기억마저 희미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해에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세폐지 및 고추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여의도 시위 이후 전농을 결성하였고,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노동탄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풍산금속에 공권력이 투입되던 상황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5공 청문회가 개최되어 초선인 노무현 의원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변형운, 강철규 선생님을 위시한 경제학자들과 손봉호 선생님 등 시민활동가들이 성숙한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당면한 경제사회적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실련을 결성하였습니다. 경실련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토지공개념 3법의 도입을 주도하셨고, 실질적인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국토개발과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이루기 위한 시민적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경실련 이후 시민사회는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각종 이슈 별로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참여를 통한 대안 마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실련의 공과는 시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친 회원들의 소망과 정성이 중앙으로 모이고 공론화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보니 경실련의 활동이 해당 시대의 일반시민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다보니 활동이 느슨하고, 사회변혁의 선두에 서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실련은 시대의 흐름을 대변합니다. 시민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한걸음이 늦을 수 있지만 경실련을 보면 일반 시민들의 열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비를 보면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경실련이 길거리에 나선 것을 통하여 민심의 향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경실련과 같은 오래된 조직이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축복입니다. 회원님들의 노력과 참여, 실무 활동가들의 열정과 헌신, 선생님들의 합리적인 지성과 주도가 조화롭게 성숙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준 선생님을 위시한 훌륭한 공동대표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

<공동대표 인사말>

# 시민속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



신철영 공동대표 cyshin50@hanmail.net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난폭하다.” <파스칼>

회원여러분! 새로 공동대표를 맡은 신철영입니다. 파스칼 봄별과 함께 나라와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이면 경실련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이제 89년 시작한 경실련 운동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89년은 “올바른 말”이 힘을 갖던 시대입니다. 반대를 넘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곧 힘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시민을 위하여(for) 바른 말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당들도 정책을 생산할 능력이 부족했고, 정부정책을 추종하던 소위 전문가들도 이미 힘을 잃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1) 사회의 커다란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공명선거, 부정부패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던 일들이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2)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들의 정책

생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집단은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시민들이 힘이 커졌습니다. 시민운동이 다양해졌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경실련 방식으로는 더 이상 힘을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30살 경실련은 새롭게 변한 조건에서 시민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의(of) 시민에 의한(by, with)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정의”와 (시민과 함께 하는) “힘”을 모두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시민과 함께하는 일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간 경실련

2018년 3월 4일

〈공동대표 인사말〉

# 한 귀퉁이에서 동발목되는 마음으로



목영주 공동대표  
myjkorea@naver.com

경실련 운동 처음 시작할 때도 함석헌 선생님의 '역사의 집을 지을 때 동발목이 돼라'는 말씀처럼 동발목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반침목이 되고 집을 다 지으면 치우는 게 동발목인데, 늘 한 귀퉁이에서 동발목이 많이 받쳐줘야 합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경실련의 정신은 한마디로 정의와 평화입니다. 정의는 결과적으로 평화에 이르러야 하고, 평화는 정의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경실련의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꼭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이기에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아니 갈 수도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인데 제가 한 모퉁이의 동발목이 되어 필요하다면 쓰이고 필요 없을 때 버려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겁다면 무겁고 벼겁다면 벼거운 길이지만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니 동발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보겠습니다.

경실련이 집이라면 주인은 시민이고 집의 골격을 갖추고 있는 건 상근활동가들입니다. 집이라는 데는 주방도 있어야 하고 안방, 거실, 어디만 화려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창고나 화장실이나 그런 게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간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시민의 안식이 되게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껏 그 일을 해주는 상근활동가들에게 고맙습니다.



〈상집위원장 인사말〉

# 모든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운동방식 모색해야



채원호 상집집행위원장  
whchai@naver.com

2019년 경실련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87년 체제 성립 후 격변기에 탄생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역사는 오롯이 한국 시민단체의 역사를 대변합니다. 경실련은 한 세대에 걸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창립 당시 발기선언문에서 제기한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경제력집중, 불공정한 분배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21세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개헌논의가 활발합니다. 경실련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대정신을 담아 내기 위해서는 지난 한 세대 역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운동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상집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실련의 더 나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해 30주년 기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첫째, 26개 지역 경실련을 포함하여 「경제실천 시민연합 30년사(가칭)」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30년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경실련 비전 2030」을 책자 형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책자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2030년 비전 제시와 함께 경실련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향성을 담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실련 내·외부의 관계 전문가들이 세미나 등을 통해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셋째, 경실련 활동의 기초가 되는 물적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회원과 후원 확대 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조성을 통해 상근 운동가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구성원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란 말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는 의미입니다. 시민단체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경실련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3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갈음합니다. ☺☺☺

[개헌]

# 대통령발의 개헌안, 제왕이 살아 있다

이현환 시민입법위원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hlee@ajou.ac.kr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발의했다.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서관이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국무회의를 거친 것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의 요구와 오랫동안 학계와 정계에서 논의되어 온 개헌의 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가다. 전체적으로 보아 개헌안은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견된다.

먼저, 전문에서 부마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지역 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 등을 추가하고, 총강에서 지방분권국가 지향, 수도를 법률로 정하게 한 것, 다문화사회의 반영 등을 명시한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 인권 편에서도 기존의 인권을 강화하고, 주거의 자유, 알 권리, 정보 기본권, 18세 이상 선거권, 이종배상금지규정 폐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의무, 노사 동등 지위,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한 것, 쾌적한

주거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건강권, 안전권, 동물 보호정책 시행 의무, 국방의무 이행자의 권리 등을 명시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청구권과 범인류적 인권으로서 망명권, 문화유산향유권, 연대권, 인도적 구조권(난민의 권리)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현대적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조직의 규정도 상당히 진전했다고 평가된다. 국회의원선출에서 비례성 반영, 국민소환, 국민발안, 예산법률제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대통령유고규정, 국가자치분권회의, 대법원구성방법, 대법관 임명방법 개선(법관추천회의), 법관임기 규정 삭제, 헌법재판관 자격확대, 헌법재판 소장 호선제, 감사원독립, 자유선거운동원칙, 지방의회조례제정권, 경제주체 간 상생규정, 토지공개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소상공인·협동조합육성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고 헌법개정조항 자구수정 등 헌법문장의 표현을 대폭 수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국회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있다. 촛불시민의 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 특히 대통령의 중요한 국회지배수단인 의원·각료검직을 허용할 가능성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총리임명권도 바뀌지 않았다. 총리임명권과 관련하여 야당에서는 총리추천제 또는 총리선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한 약화와 제왕적 총리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의원내각제라 하여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총리추천제 내지 총리선출제를 택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총리추천 조항은 부칙에서 그 발효시기를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2020년 5월 30일로 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사법제도다. 기본구조에서 1년에 43,000건(2016년 기준)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을 그대로 둔 채 대법관 및 법관 임명방식만 바꿨다. 최고사법기관을 다원화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임기 10년 규정을 폐지한 것은 적절하나, 소규모 전문법원 등 다양한 법원구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실책이다. 법률로 다양한 법원을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법원소속 법관의 임기와 자격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여, 매우 진전된 헌법안임에도 국가조직의 측면에서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심히 부족하다. ☹☹



[재벌]

# 더 이상 재벌을 위한 나라는 없어야 한다.

이성윤 경제정책팀 간사  
pain2c@ccej.or.kr

## 재벌과 그들의 연결고리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그 순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삼성의 힘도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경영복귀를 선언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삼성의 힘에 탄식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삼성에게만 적용되는



▲ 집행유예로 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수많은 재벌총수들이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사면되었다. 그리고는 대국민 사과와 재산일부의 사회환원 등을 약속하며 경영에 복귀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재벌은 이제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성장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장충기 전 삼성 사장의 문자를 보면 사회 각계에 퍼져있는 이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간부, 정부 관료, 전 검찰총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어디든지 그들의 힘이 미치고 있었다. 재벌과 결탁하면 승진이 보장되었고, 큰 돈을 거머쥌 수 있었고, 자녀의 취업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둠의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기회는 있다.

2017년 5월, 적폐청산을 외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재벌저격수로 불리던



▲ 재벌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아직 이 정부에게는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이야말로 재벌에서 시작된 어둠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에게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었다. 재벌을 지금처럼 괴물로 만든 것은 그동안 정부가 준 특혜들 때문이다. 한때는 재벌의 성장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기대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더 나은 사회와 더 좋은 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재벌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등을 근절하겠다고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취임 1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재벌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말만 9개월째 반복해왔다.

하지만 스스로 개혁하는 재벌이 없다는 것을 김상조 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재벌을 위해 시간을 줄 것이 아니라, 재벌 때문에 피해를 받는 많은 시민들을 바라봐야 한다. 괴물이 되어버린 재벌은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파괴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재벌개혁으로 그들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재벌만을 위한 나라는 없어야 한다. ☹☹☹

[보유세]

#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

오세형 경제정책팀 간사  
dipsec@ccej.or.kr



▲ 경실련, 참여연대, 박주민의원실 공동주최 -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토론회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격차사회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 큰 짐이다. 특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나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말들이 부동산 자산이 가져오는 불공정성과 불공평성을 방증한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가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보유세 강화는 과세기준 정상화부터 시작해야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과세 산정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부동산 가치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된 공시가격이 공평과세의 기초인 것이다. 더욱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70%에 이르는 반면 고급 단독주택이나 상가업무빌딩의 경우에는 시세반영률 30~40%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편차로 인한 불공정과세로 부동산 자산가와 서민간의 자산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를 제거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공시가격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과세

표준 산정과 세액부담시에도 여러 군더더기 장치들로 인해 보유세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 요원하다.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가 그것이다.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야 한다. 과거 도입이유가 사라진 현재는 과세표준과 세율로만 세액이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담상한제 역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시에 가격상승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지

만, 지금은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보유하게 되는 불로소득의 원천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2005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과세하는 방법이 인별 합산이 아닌 세대별 합산이라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를 받기도 하고,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려는 과거 정부의 정책방향을 거치며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세제로 전락하였다.

여전히 거품이 심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유세제 정상화,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적절한 강화는 중요하다. 세금 폭탄이라거나 주택, 특히 아파트에만 그 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등의 오해를 사기도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적정 수준의 세율 인상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산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의로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부동산 자산불평등은 완화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세정의 차원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보유세 강화는 희망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청년]

# 애달픈 청년, 지적이 아닌 응원이 필요한 때

최예지 사회정책팀 팀장  
cyj@ccej.or.kr

“이번 생은 망했다.” 청년한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자조 섞인 말을 하는 청년에게 기성세대는 ‘요즘 애들은 의지가 약해. 배가 불러서 그래’라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 청년이 절망 속에 빠진 게 정말 청년 개인의 문제인가? 과감히 아니라고 대답한다.

청년이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여 결국, 열심히 살아도 지금의 팍팍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평생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고, 일해도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결국, 이 시대 청년들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채로 모든 걸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 청년은 얼마나 어려운가?

청년 문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단연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 문제를 두고 청년이 눈높이가 높아서 생기는 미스매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걸 청년만 탓할 수는 없다. 청년에게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등의 질 낮은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떠밀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KDI는 첫 일자리 임금은 첫 직업의 시작 후 10년 이상 임금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청년이 구직 기간이 길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첫 직장의 선택이 앞으로 10년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자리 시장에서 청년의 실제 체감 실업률은 28%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단순 실업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꼽히는 게 채무 문제이다. 높은 주거비와 늘어나는 교육비는 청년의 경제적 궁핍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은 질 낮은 주거환경, 식비 지출 감소, 오락 문화 등 여가 지출 감소, 심지어 의료비 지출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년

은 이제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까지 늘고 있다. 전체 가구 부채 중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규모 비율은 34%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청년은 기성세대 보다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하는 청년의 수가 늘고 있어 앞으로 청년의 소득은 낮아질 것이다. 결국, 청년의 부채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힘들어 보인다. 지금의 청년은 아프다 소리 한 번 못 내고 점차 명들어 가고 있다.

### 수 많은 정책들, 하지만 청년은 체감하지 못한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증대세제, 지자체의 청년수당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종류는 많다. 그러나 정책을 청년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증가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 지원해주면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청년이 진짜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문제는 2016년 감사원의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 청년고용대책 수립 시 근로 형태, 고용유지, 임금수준 등 고용의 질을 대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실제 활용도 저조하였다고 지적했다. 청년 정책에서 청년은 빠진 채로 곁돌고 있다.

최근 3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들을 다수 발표했다. 하지만 한시적이고, 정책 시행까지 걸림돌이 많아 보여 아직은 불안하다.

###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사회안전망 속으로

청년 문제를 젊으니깐 '노오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보호할 때이다.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선심성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더 미뤄서도 안 된다. 청년 부조 등 청년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넣어야 한다. 2018년부터 경실련은 청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많이 늦은 거 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보태 절망 속에 빠진 청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작지만 한 개 한 개의 노력과 공감하는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와 기대를 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당장 청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생겼을 수 있다. 지금 청년에게는 거창하고 덧없는 위로나 조언보다 커피 기프트콘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

[지방선거]

#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허훈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pahh@daejin.ac.kr

## 1. 지방선거 지방선거답게 치르자

이번 6·13지방선거는 지난 해 촛불 집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변화가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을 스스로

의 힘으로 끝내면서 정치의식이 갑절은 더 성장하였다. 이제는 신장된 정치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치러내었으면 한다. 지방선거답다는 말은 이렇다. 선거구마다 자치의식이 신장되고, 지역의제를 가지고 고민하여 투표하고, 지역연고에 안주한 거대정당의 표발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의 중앙예측의 지방정치를 변화시키도록 지방선거를 하자는 의미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분권이 신장되어야지, 위로 부터 헌법만 바뀐다고 지방분권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의 지방선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 이번 선거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해내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지방자치를 주민의 손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중앙정당과 그 정당의 하수인들에게 농락당하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공천단계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치의 지역주의를 벗어던지는 일이다. 지연, 학연 등에 얽매이는 선거를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셋째는 자치와 지역발전의제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독려해야 한다. 권력자와 사진을 찍은 것이, 정당의 실력자와 아는 것이 배경인 후보를 찍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는 없기에 말이다.

## 2. 매니페스토 선거의 필요성

지방선거를 지방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철 지난 유행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매니페스토 선거는 여전히 답이 될 수 있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가 참공약을 내걸게 하고 이것을 평가하여 가장 좋은 공약을 내건

사람을 뽑는 것이 기본개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뽑거나 시장을 뽑거나 이는 결국 다수 인간과 선출된 한 인간 간의 계약에 의존하는데, 결국 공약이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좋은 공약을 만들려다 보면,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참공약을 만들다 보면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공부가 된다.

그러므로 좋은 공약을 보고 표를 주는 것이 그나마 현시점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인간을 보고 뽑으면 지역의 제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나, 사익추구를 하는 사람이거나, 정책적으로 무능한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다. 사실 권력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장난감을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 역시 누구나처럼 유혹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보통의 시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상 참으로 많은 유사한 경험을 했다. 이는 선택된 소수에게 다수의 운명을 맡긴다는 그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매우 사소한 것들에서 관찰된다. 칭찬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다”(Tocqueville, 2003:262)라고 말한다. 그 결과 선출직 공직자들이 직과 이로부터 부여된 권력을 이용하여 전횡을 일삼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스캔들적 상황도 발생한다. 결국 선출직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가-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이 점점 멀어지고, 차츰 독재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가 독재화할 가능성을 경고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의 하나가 매니페스토(참공약으로 번역된다)이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에 왔는데,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사용된 것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에 의해서였다. 그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7년에는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집권에 성공해 불을 붙였다. 블레어는 대처정부 이후의 20년 보수당 정권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약(매니페스토)을 내놓고 이를 이행하여 영국을 유럽의 맹주로 다시 세워놓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에 의해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당시에 후보자에 의한 뺑 공약과 중앙당이 내려 보내는 소위 허수아비 공약이 판을 쳤었다. 이를

막고자 도입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지방선거가 집권당의 중간평가라거나, 지역연고의 정당에 대한 몰표현상이 여전해 그 효과가 반감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치루기 위해서 매니페스토 선거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 3. 각 지역의 매니페스토가 지역도 발전시킨다

매니페스토에 의한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들에게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현가능하다는 말은, 공약을 내놓을 때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수단, 그리고 달성목표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시된 매니페스토 공약은 투표시에도 참고가 되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마치 계약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임기말기에는 그 이행 정도를 보고 다음 선거에 참고할 수도 있다. 계약에 명시된 것을 지키지 않은 권력자를 다시 뽑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선출직 후보자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고 해서 매니페스토 선거가 자동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그동안 광역선거에서도 쉽지 않았던 것이니 기초선거에서도 쉽게 되지 않는다. 매니페스토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시

민들을 위한 매니페스토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둘째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시민 공약검증단을 결성하고, 셋째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하게 하며, 넷째 이를 평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방선거에 반영하게 하는 절차와 구조를 잘 만들어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적지 않을 것이다.

후보자들의 옥석을 가려야 하는 유권자들로서는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이 참 공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힘을 길러가야 하는 것이다. 참공약은 구체적이고(smart), 그 실현여부가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예산 등의 측면에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achievable), 정책내용이 타당해야 하며(relevant), 달성에 걸리는 시간계획(timed)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A라는 시장후보가 갑시의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했다 하자. 지역경제가 미약한 갑시로는 참 솔깃한 공약이다. 헌데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시장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를 유치할 것인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헛공약이다. 말만 번드르르하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시장이 되고 싶은 꿈만을 가진 사람은 헛공약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시민의 능력이다. 유능한 시민은 구체

성이 있는 참공약을 내걸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장을 뽑는다. 무능한 시민은 시장이 되겠다는 권력욕만 있고 시장이 된 후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 사람을 뽑는다. 대개 이런 사람은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공약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표를 주는 경향이 있다. 결국 시민의 수준이 시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짧은 지방자치 역사상 이번 6·13 지방선거의 의미는 자못 크다. 그동안 선거만 있었지, 정책은 없었다는 지방선거이다. 선거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결집되기 보다는 중앙정치엘리트의 하수인을 뽑아주는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지방선거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각 자치구역마다 유권자들이 공약을 잘 보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서 지역도 살리고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답게 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판교 입주10년, 제2강남은 됐지만 집값안정에는 실패했다

김성달 부동산국책감시팀장

판교신도시가 입주 10년을 맞는다. 판교개발을 추진하며 참여정부가 제시한 명분은 제2강남 건설에 의한 집값안정이었다. 토지 대부분이 논밭임야로 그린벨트 파괴를 반대하는 시민 사회의 반발이 강했던만큼 개발명분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주변 집값이 폭등하였고, 판교분양가는 당초 평당 750만원에서 1700만원대까지 상승하여 무주택서민의 좌절과 분노만 커졌다. 경실련도 판교의 투기분양 중단과 공영개발 촉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판교분양을 강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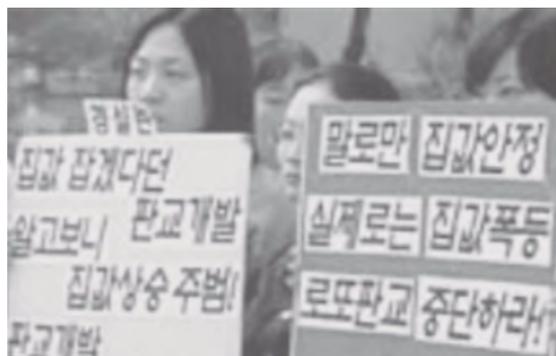
## 강제수용으로 시작했지만 블로소득 잔치상으로 변질된 판교신도시

▣ 평당 93만원에 강제수용한 아파트 땅값은  
36배나 상승하며 개발이익만 19조2천억원 예상

판교는 2001년 [저밀도 전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참여정부가 [강남집값 안정을 위한 제2강남 개발]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당초 평당 750만원의 분양가도 850만원

으로 상향되었다. 2004년 토지수용할 때 땅값은 평당 93만원이었지만 판교분양가를 최종적으로 평당 1,100~1,700만원으로 결정지으며 땅값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를 제한 후 용적률을 고려해 땅 한 평의 가치를 계산해보면 분양당시 토지비는 평당 2,199만원이고,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2011년에는 평당 3,217만원까지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남서초에 9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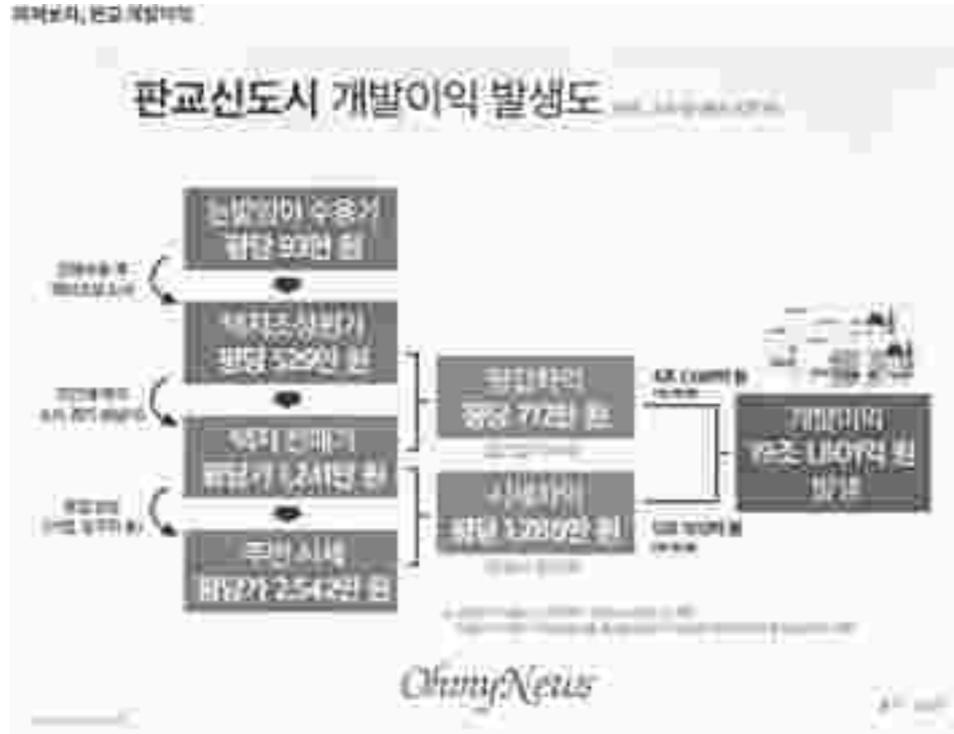


지금 판교는 명실상부한 제2강남이 되었지만 현재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10억원을 넘어서며 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의 막대한 시세차익은 물론 공기업의 땅

장사, 건설사의 바가지 분양까지 나타나며 판교 주거안정이 아닌 블로소득 잔치상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2018년 3월호



원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며 판교 집값도 주춤했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다시 상승, 현재 땅값은 3,460만원까지 상승했다. 수용가보다 36배나 상승한 것이다. 아파트용지 뿐 아니라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용지 등까지 시세를 조사하여 적용한 결과 판교신도시 전체 땅값은 25조 4,696억원(평당 2,542만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판교 개발을 위해 토지수용, 택지조성에 들어간 개발비는 6조 1,688억원으로 추정되어 19조 1,801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에 입주자들의 시세차익까지

먼저 평당 93만원에 강제수용한 후 건설사들에게 택지를 원가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매각한 공공사업자(LH공사, 경기도시공사, 성남시)가 6조 2,688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택지매입 후 소비자에게는 건축비를 부풀려 매각한 건설사들과 아파트, 벤처단지 등 입주자들의 시세차익까지 포함한 민간의 개발이익은 12조 9,112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1〉 주체별 개발이익 추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공공(택지판매이익)			민간(시세차익)		
		소계	LH/성남시	경기도	소계	기업 등	아파트입주자
개발이익	19조 1,801	6조 2,688	5조 8,0391	4,649	12조 9,112	5조 8,770	7조 342

주) LH/성남시의 경우 총 판매이익(7조1,366억원)에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손실(8,678억원)을 고려함.

판교 개발 이후 강남땅값도 3.8배, 795조원 상승

판교는 주변 집값까지 자극하며 강남 전체 땅값을 상승시켰다. 2005년에는 경실련이 판교

개발 전후 주변신도시와 강남권 아파트값 변화를 조사, 5개월 만에 총 34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1월 ~ 2005년 5월).

〈그림 4〉 강남 아파트 시세 변화

(단위 : 만원/평)



판교신도시

2018년 3.4월호

이번에는 강남·서초·송파 등 3개구의 아파트값 변화를 조사하였다. 경실련은 강남3구의 16개 주요 아파트단지의 최초 분양가, 연도별 시세를 조사하여 아파트값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판교개발 전인 2001년 강남아파트값은 평당 875만원으로 은마아파트 한 채가 2억2천만원이었다. 하지만 판교분양 이후인 2007년에는 11억원까지 상승하였다. 강남아파트 전체로는 평균 평당 2,857만원까지 상승했고, 이는 2001년 아파트값의 3.8배나 된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자치구별 용도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수조사하여 아파트용지와 다른 용도와의 토지비율도 도출하였다. 이를 앞서 조사한 아파트용지의 땅값에 적용하여 강남3구 전체의 용도별 땅값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강남3구의 땅값은 2001년에 비해 795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 허용하는 판교식 개발을 중단해야 서민주거안정도 가능

이처럼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과 주변 집값 추이를 조사한 결과 판교신도시가 서민주거안정과 강남집값 안정이라는 개발취지와는 달리 개발주체와 건설사, 입주자와 기존주택보유자 등에게만 불로소득을 안겨줬음이 재확인되었다. 때문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는 더욱 멀어졌고, 부동산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국민의 눈발임야를 강제수용하면서까지 추진된 판교신도시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업의 땅장사와 민간건설사의 집장사 허용 때문이다.

만일 경실련 주장대로 판교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LH 등 공공이 직접 개발하여 토지임대 건물분양, 장기공공임대 등의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했을 뿐 아니라 판교신도시의 개발자인 LH의 자산도 크게 증가, 재정건전성 강화도 가능했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주택 100만호 확충을 위해 40여개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도시 내 주택 중 43만호 공급가능한 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겠다고 밝혀 제2, 제3의 판교식 개발에 따른 서민주거불안만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확대 이전에 잘못된 공공택지개발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공급을 위해 투명하고 세세한 분양원가 공개, 완공후분양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집값안정책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당정책 제안 및 후보자 공개질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

# 정부가 메르스 피해 배상하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다 -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  
nari@ccej.or.kr

법원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메르스사태를 예방하지 못하고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 정부에 배상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번 승소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 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결정이다. 정부는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

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메르스 감염공포로 사회·경제 활동은 마비됐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 대응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했다. 피해자들을 도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는데, 피해자들의 구제와 함께 정부의 실책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했다.

이번 승소 사건은 16번(슈퍼 감염자/삼성의료원 입원)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 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단기적 대책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렵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 **참고자료** //

■ 2차 공익소송 개요

- 원고 : 메르스 감염 사망자 또는 확진자 및 격리자 총 34인
- 피고 : 국가, 지자체, 병원
- 법률대리인 : 강명진(법무법인 정성) 박석홍(법무법인 인화) 부종식(법무법인 나눔)  
 심학섭(법무법인 시원) 이용재변호사 장용혁(법무법인 영진)

■ 사건 요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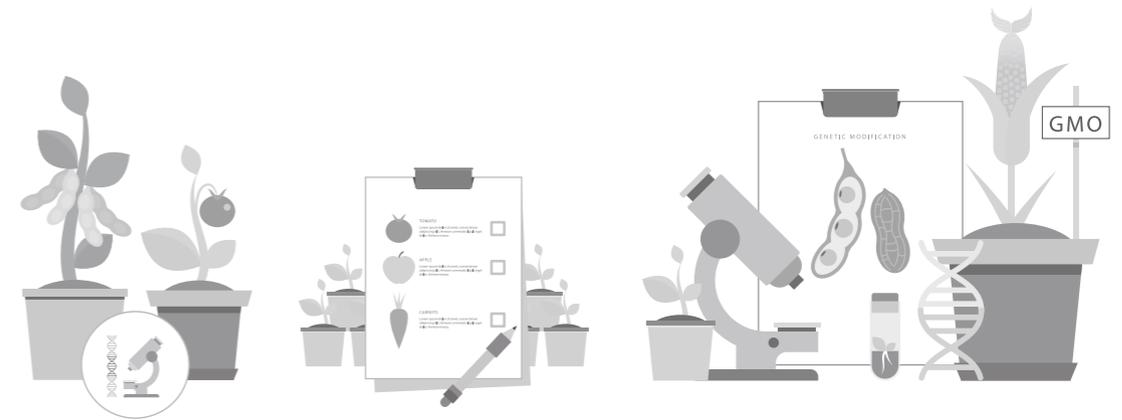
연번	원고	피고	인과관계	청구금액
1	61번 확진자 외 격리 3인	삼성병원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14번 환자로부터 감염	2,920만원
2	111번 확진자 외 격리자 3인	삼성병원 / 대한민국 / 서울시 중구 / 강원도 속초시	14번 환자로부터 감염	1,550만원
3	104번 사망자의 가족(격리 4인)	삼성병원 / 대한민국 / 서울시 강서구	14번 환자로부터 감염	14,820만원
4	157번 사망자의 가족(격리 3인)	삼성병원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14번 환자로부터 감염	12,780만원
5	24번 사망자의 가족 (확진 1인, 격리 1인, 비격리 1인)	건양대병원 / 대한민국 / 대전광역시	16번 환자로부터 감염	11,120만원
6	38번 사망자의 가족 (비격리 2인)	대청병원 / 대한민국 / 대전시 서구	16번 환자로부터 감염	31,800만원
7	30번 확진자	대한민국	16번 환자로부터 감염	1,000만원
8	42번 사망자 가족 (격리 2인, 비격리 2인)	평택성모병원 / 대한민국	1번 환자로부터 감염	17,900만원
9	28번 사망자 가족 (격리 3인)	평택성모병원 / 대한민국 / 경기도 평택시	1번 환자로부터 감염	17,500만원
10	150번 확진자 외 격리 5인	건대병원 / 대한민국 / 서울시 노원구	76번 환자로부터 감염	1,830만원
원고 34인				

# 그 많은 GMO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성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한양여대 교수  
psy0822@hywom.ac.kr

청와대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GMO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한창입니다. 경실련을 비롯해 57개 소비자-환경-학부모-급식-농민단체가 2018년 3월 12일부터 30일간 진행합니다. 우리는 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GMO퇴출 국민청원을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45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다는 연구도 있지만, 각종 암과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가 아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우리 생태계 환경이 보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부는 식용 GMO를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전략을 수립하고, GMO 표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GMO 표시제도 강화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식품에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거나, 첨가물(부형제, 희석제 등)로 사용된 경우에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조항이 많아, GMO를 사용한 식품 대부분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해 주고 있어,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MO 농산물 포함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소비자, 시민,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만이 청와대 답변과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식용유, 간장, 된장, 라면 스프 등을 만드는데 GMO 농산물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마트 등에서 GMO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가공식품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봄바람이 되어주길

조성훈 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 출처 : 여성경제신문

연 초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평창올림픽을 지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됐다. 지난 9년간의 터널과 같은 남북관계를 지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자 벌써부터 우리 모두를 가슴 뛰게 만든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북한의 대화 제의에 적극입하며 남북 단일팀, 공동입장,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등을 이끌어 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평화올림픽을 위한 간절한 염원이 더해진 것도 한 몫을 했다.



▲ 출처 : 연합뉴스

이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평화의 꽃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파국으로 내달을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의 대화분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말 어렵사리 대화분위기가 마련됐다. 이제 막 한반도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켜 상황이다.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남북간 이전 사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남북미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핵 동결대가로 경수로 건설과 에너지 제공을 약속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얼마 못가 합의는 파기되고 말았다. 이후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이 또한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이행되지 못했다.

때문에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아울러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미국은 그 동안의 제재와 압박 일변의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단순한 북미 간 중재자에서 벗어나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 재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대북 특사 이후에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특사를 파견하며 북한의 메시지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노력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지금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함이다.

최근 경실련통일협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산가족상봉 재개가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치적 색깔이 가장 적고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상봉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것과 같이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나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 상당수가 70세 이상으로 초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사망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에 상봉 재개가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3월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기회가 마련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 막 출발지점에 섰으며 낙관은 금물이다. 차분하게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하며, 일시적 평화가 아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힘들게 대화 분위기가 찾아온 만큼 지금의 대화 분위기가 따뜻한 봄 바람이 되어 주길 바란다. ☺☺

# 공수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국회는 지금?

정택수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wild@ccej.or.kr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를 별 소득 없이 끝맺은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마저 허무하게 빈 손으로 끝나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자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올해 6월까지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사개특위는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더니 느닷없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활동시한의 절반을 업무보고로 허비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사개특위의 답답한 행보는 업무보고에서도 계속됐다. 3월 13일에 있는 검찰의 업무보고 중 문무일 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지적하며 독립적인 공수처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적절한 논의를 이어가기는커녕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회의를 마무리했다. 사개특위는 이렇게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검찰개혁 논의를 허무

지난해 9월 법무부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설치의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공수처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게 끝내버리고 말았다.

국회의 공수처 논의가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의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높아만 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 흔들고 있는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검찰내부의 성폭력 증언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란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정의구현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 내부에서 성폭력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은 검찰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을 확증으로 만들었다.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발언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고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혐의와 의혹 역시 공수처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동안 세 차례나 특검의 수사를 받은 바 있는데 정권교체가 된 현재에 이르러서야 뇌물 110억·횡령 350억 원 혐의가 포착되어 기소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청탁을 한 의혹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나왔다. 지금까지 검찰이 권력을 견제하는데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정부의 공수처안을 비롯해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 법안도 역시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제 사개특위는 더 이상의 책임방기를 중단하고 업무보고 종료 직후 즉각적으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이 날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정쟁에만 몰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의 시작이 되고 말 것이다. ☹️

현장스케치

제15기 1차 중앙위원회

“대구 비슬산 아래서 마음을 나누다”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경실련 제15기 1차 중앙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금)~24일(토) 대구 비슬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강원, 대전, 충청,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제주, 부산, 영남권 전국 각

지에서 아침부터 서둘러 출발해 대구로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숙소와 식사, 일정 등을 정성껏 준비해주신 대구경실련 분들이 먼 거리를 달려온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정책협의회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사업보고와 2018년 사업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해도 전국의 경실련이 각자의 지역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사업보고를 마친 뒤에는 전국경실련이 올 한해 함께 힘 모아 해결 사업들에 대해 분임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분임토의 주제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및 개헌 대응,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공평 과세 기준 바로잡기, 청년살리기 프로젝트, 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등 모두 4개였습니다. 주제별로 흩어져 열린 토론회를 했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점에 집중하고 우려되는 지점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등에 대해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주목되는 주제는 청년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경실련이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청년이 된 경실련이 청년을 살리는 운동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청년운동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청년에게 필요한 운동이 될지 어렵기도 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토의에 참여한 이들 모두 세대별로 또 지역별로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며 새롭게 시작하는 운동에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녁식사 후에 중앙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공동대표와 중앙위 의장단을 새롭게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외부 명망가들을 대표로 세워왔던데 반해 이번에는 경실련에서 오래 활동하며 내부에서 지도력을 쌓아온 분들이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권영준 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정미화 대표(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신철영 대표(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및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퇴우정령 대표(조계종 월성사 주지), 목영주 대표(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 등 모두 5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는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과)가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은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가 연임됐고, 김철환 원장(새안산상록의원),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조문수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가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밖에 앞으로 중앙위원회를 연 2회에서 1회로 하고, 8월에 했던 중앙위 행사 대신에 임원 및 상근활동가 교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경실련 규약을 개정하고, 안타깝지만 불투명한 회계와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던 지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경실련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중앙위원회를 마쳤습니다. 바로 모두가 기다리던 팔도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친교하는 시간이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 중앙경실련 장성현 간사(왼쪽)와 광명경실련 김정숙 간사가 경실련 우리의 다짐을 낭독했다.

1년에 한번만 만난다고 생각하니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인지 모두들 잠을 잊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대구의 명소인 김광석 거리를 돌아보고, 대구지하철참사 기억공간과 근대골목을 투어하며 알찬 일정을 보내고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 4·3 70주년 제주 시민활동

김신숙  
제주경실련 정책팀장  
chejungo@daum.net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당시 제주도 인구 10%에 이르는 2만 5천~3만여명의 희생당한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 4·3사건 당시의 제주도 상황은 해방으로 부풀었던 기대감이 점차 무너지고, 미군정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약 6만명에 이르는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전염병(콜레라)의 만연, 대홍년과 미곡정책의 실패 등 여러 악재가 겹쳤다. 특히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 출신들이 미군정 경찰로의 변신, 밀수품 단속을 빙자한 미군정 관리들의 모리행위 등이 민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사건의 배경에는 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로동당계열의 좌익세력들의 활동과 군정경찰,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우익 반공단체의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등이 복합되어 쌍방 간의 적개심으로 일어났다.

제주 4·3사건은 한국 전쟁이 휴전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조사 결과 사망자만 14,032명(진압군에 의한 희생자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 1,764명 외)에 달한다. 학살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휴전되고 그후 1954년 9월 21일까지 계속되었다.

70년전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일어났던 비극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다. 이 침묵 속에서 제주도민들은 4·3사건의 발생으로 살기위해 제주를 떠나야했고, 제주도민 대다수는 4·3으로 인해 죽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 보호·명예회복 또한 절실한 과제다.

2000년대 들어서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에 대해 국가가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4·3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분에서 만족할 만큼의 해결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제주4·3 미국 책임 규명 10만인 서명운동



▲ 4·3 특별법 개정 촉구 운동

제주경실련

2018년 3월호

제주 4·3 70주년 기념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주 4·3 70주년 기념 10대 과제〉	
① 4·3 정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실시	⑥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사업 정상화
②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 보상 제도화	⑦ 4·3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③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법제화	⑧ 4·3 왜곡방지 및 명예훼손 처벌법 규정 마련
④ 4·3 유적지 보전 구체화	⑨ 4·3 당시 미군정의 잘못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과와 국제적 해결
⑤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⑩ 4·3 정명 찾기

70년 동안 침묵 속에 묻어두어야 했던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10대 과제 추진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소속되어 있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다.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소속단체들을 통해 4·3역사 바로 알기 릴레이 캠페인, 4·3희생자 유해발굴 재개, 제주 4·3 미국 책임규명 10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역시 2017년 12월부터 제주 4·3 미국 책임규명 10만인 서명운동 등을 포함하여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함께 4·3 역사 바로 알리기 홍보에 나서고 있다. ☺☺

## [인터뷰] 동지내몰림 시리즈 2편 노량진 '카페 7그램' 인터뷰

정리 :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지난 1, 2월호(통권 161호) 서촌 공중폭발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는 노량진의 카페7그램을 인터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중폭발 인터뷰 보시고,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도를 넘는 건물주의 횡포에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공중폭발은 개인이었지만, 카페7그램은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주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법을 더 잘 알아서 법망을 피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점은 같았습니다. 동지내몰림 두 번째 인터뷰는 건물주인 박문각과 싸우고 있는 노량진 카페7그램 박지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Q.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A. 2012년 1월부터 박문각 학원 1층 지금 자리에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카페자리는 외진 곳이라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외진 자리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학원측에서 저를 유치하려고 주차도 무료로 해주고, 홍보를 위해 간판 설치도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1억 3천에 66만원이라는 임대조건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5년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오래 하라고 해서 그 말만 철썩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점차 손님이 늘고 장사가 잘 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박문각 측이 조금씩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2014년에는 학원 입구에 있던 홍보 배너를 강제로 이동시키고, 2015년에는 간판도 강제 철거하더니 급기야 2016년 6월 1일 매장을 비우고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그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더라고요. 저는 반소 안하면 변호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이 보증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판결이 내려져 현재 감정평가가 절차가



진행중이고, 간판 강제 철거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Q.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열렸다고 들었는데 합의는 왜 결렬됐나요?**

A. 저희 가게에 1억 7천, 2억에 권리금 내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용증명 받고 나서 그러면 팔고 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박문각 측에서 거절했어요. 재계약도 안해주고, 팔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어요. 저는 합의금을 7천에서 6천, 5천, 4천까지 내려서라도 합의를 원했어요. 박문각은 처음에 1천 5백만원을 얘기하다가 1천만원으로 내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인테리어에 투자한 비용만 1억 8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부동산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박문각과 싸울 자신도 없고,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고 싶어 박문각이 제시한 1천만원에 매장을 비워주기로 하고 서울시 중재 합의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박문각 측이 합의를 깨고 소송을 진행해버린 거예요.

**Q. 자리 잡기까지는 사장님이 노력한 부분도 많으실 텐데 억울하시겠어요.**

A.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같은 1층에 있던 햄버거집, 피자집 1톤, 5톤 물류 트럭들이 항상 저희 카페 앞에 주차가 돼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불법주차 차주들 일일이 설득한 끝에 차 없는 인도를 만들고 구청의 협조를 얻어 주차봉을 설치하고 상권을 만들었어요.

영화이벤트, 뮤지컬이벤트도 하고, 손님들 끌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대로변 횡단보도 앞에 있는 약국에 한 달 동안 매일 찾아가서 홍보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약사님이 감동해서 포스터도 정문에 걸게 해주고, 배너도 놓으라고 해주더라고요.

**Q. 박문각에서 간판은 왜 떼었을까요?**

A. 2015년 박문각 사무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시점에 학원 입구에 카페 간판이 먼저 보이니 학원 이미지에 안 좋다고 철거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간판이 철거된 이후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더군다나 간판 협조사항은 계약당시 특약사항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검찰에서 관리인이 나랑 합의해서 떼다고 거짓 말을 하더라고요. 돈 들어서 특약까지 한 것을 제가 합의해서 뗐 리가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 관리인이 회장님 지시라고 했거든요. 특약사인을 직접 한 전무를 찾아갔을때도

회장님 지시라 막을 수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혼자 했다고 그러고 전혀 엉뚱한 감사가 시켰다고 말을 번복하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돌출간판은 불법이라 동작구청 행정처분으로 저희 간판을 철거한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동작구청에 의뢰해서 알아보니 행정처분 사실이 없대요. 그리고 그 건물의 모든 돌출간판 중 저희 간판만 철거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Q. 박문각이 이렇게까지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 저희 옆 분식가게는 주인분이 암투병하시다 돌아가셔서 아내 분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변호사 비용, 생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두려워 함께 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2016년 11월에 권리금 전혀 못 받고 나가셨어요.

박문각에서는 저에게 저희 매장자리와 옆 가게를 연구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내부 관련자들 통해 들은 바로는 카페를 하려 한다고 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건물주가 1년 6개월간 비영리 사용시 보상 안 해도 된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Q.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이세요?**

A. 자식과 와이프, 어머니에게 제일 미안해요. 명도소송 당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를 저희집 근처로 모시고 왔는데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죠.

저희 같은 세대는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제 노후는 생각도 못해요. 장사도 안 되니까 다음 달 생활비 어떻게 할까? 여기 정리되면 나가서 뭐 해야 하나? 쫓겨나는 것보다 나가서 뭘 해야 하나가 걱정이예요.

건너편 테이크아웃 카페도 권리금 7천이예요. 권리금을 1억이든 2억이든 받아도 카페는 이제 자신이 없어요. 자리 찾기도 1년 걸렸어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정말 새벽부터 올인하고 일했는데 건물주 욕심 하나에 모든 게 무너졌죠.

직장인의 마지막 보루가 자영업인데, 장사가 안되고 최저임금 오르고 이런 건 내가 극복이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최저임금 오르고 하면 서로 공감대가 생겨서 열심히 하니까 잘 돼요. 그런데, 건물주에게 쫓겨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없어요. 또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Q. 사장님처럼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A. 가장 좋은 것은 법 밖에 없잖아요. 최소한 10년은 보장해줘야 돼요. 임대료 빼고 초기 투자비용만 1억 8천 든 거 생각하면 10년은 돼야 기반잡고 넘어가는 게 가능해요.

10년 보장해주더라도 자영업자가 이미 너무 포화상태잖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장사가 안돼서 접는 거는 얘기 못해요. 자기 책임이니까. 근데 사회적인 환경 있잖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 환산보증금 문제, 건물주 갑질,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1년 6개월 비영리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내쫓는 것은 막아야죠. 비영리 1년 6개월 조항같은 것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빼야 돼요.

권리금은 무조건 세입자가 받을 수 있게, 이럴 땐 주고 이럴 땐 안주고 하지 않도록 해야해요. 저 사람한테 하면 1억 받는데, 건물주에게 가면 천 만원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현재로선 언론에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예요. 아무래도 기업인지라 언론플레이도 잘하고, 언론에 예민하더라고요. 간판 강제철거 형사 수사 관련 담당검사가 2017년 이후 4번이 바뀌고 아직도 수사중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지금으로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법적인 잣대보다 사회적인 여론을 잘 만들어주시면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건물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내 학원업계 굴지의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영세상인을 감언으로 입점을 시켜 놓고서는 피땀 흘려 카페를 안정화시키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쫓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고 법적 대응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압박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갑질행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건물주는 경찰, 검찰 공무원 교육과 부동산 강의를 하는 학원입니다. 법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려 합의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 되길 기대합니다. ☺☺

# [2018년 동계 인턴십 소감문] 동계 인턴! 그들이 말하는 인턴이야기

김연주(동국대 경제학과)  
경제정책팀 인턴  
rlaudswn@hanmail.net

김혜빈(성신여대 법학과)  
홍보팀 인턴  
heabin9604@naver.com

김연주 경제정책팀 인턴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월 8주간 인턴 생활을 한 김연주입니다. 우선 8주간의 짧은 인턴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실련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실련을 지원할 당시 단체 이름에 '정의'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동안 학생 신분으로써 어떤 것이 정의롭고, 또 어떤 것이 정의롭지 못한 지 명확한 주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사회인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옳고 그름에 관한 뚜렷한 신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정의롭기를 바라기에 저 역시 스스로가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인턴 활동을 결심했습니다.

경제팀에 근무하면서 시민단체가 어떤 방식

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 사회 전반에 필요를 외치는 목소리는 많지만, 그것들 중 더 필요한 것을 선별하고 다듬는 과정이 까다로웠음을 알았습니다. 단체는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공공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정부, 지방자치, 공공기관, 기업이 이행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함께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시기에 인턴으로 함께 하여 경제팀 사업 계획 회의 시간에 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적 이슈를 다들 상세하게 알고 계셨고, 그 덕에 회의를 마친 후 나름대로 다시 찾아보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보고 배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도 좋은 경험을 쌓았

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식량 자급률 제고에 관한 정책 토론회'는 인턴 활동 중 상당히 의미 있던 활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평소 농업 부문에 관심이 많았기에 인터넷으로는 찾기 어려웠던 심층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식량자급률의 현황과 국내 농업부문의 문제점, 대외적으로는 해외 곡물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당면하게 될 위기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인이 된다면 농업부문에 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진중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농업 토론회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심이 부족했던 주제 토론회를 통해서도 그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나름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김혜빈 홍보팀 인턴

안녕하세요. 2018년도 동계 인턴십 홍보팀 인턴 소속으로 2개월 간 근무했던 김혜빈입니다. 어느덧 경실련에서의 2개월간의 시간이 지나, 소감문을 쓰려하니 1월에는 더디 갔던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한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저는 경실련과 그 외의 시민단체에

인턴 활동에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과의 소통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실련에 어떻게 근무하게 되었는지, 어떤 근무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셔서 경실련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에도 모든 분들께서 성심 성의껏 대답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활동 중 많은 배려를 보여주신 저희 경제팀 권오인 팀장님과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경제팀 최예지 간사님, 이성윤 간사님, 오세형 간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 경제팀뿐만 아니라 틈틈이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던 여러 팀장님, 부장님, 간사님들께도 정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에서 보고 느낀 것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한 지식이 없어 지원하기에 앞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인턴십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무엇이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여 경실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문제점들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이기에 경제 및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슈들에 대한 제 부족한 지식을

# 아버지 축출의 시대

- 80년대 홀아비 시인들의 작품 읽기 -

정호철 국제팀 간사  
hcjung@ccej.or.kr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접했던 마케팅 관련 수업과 다양한 기업 공모전 활동 및 대외활동에 참여했었던 저는, '홍보팀' 직무에 관심이 있어 홍보팀 소속 인턴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개월 간 홍보팀에서의 직무에 맞게 대체적으로 경실련을 알릴 수 있는 업무를 도맡아했습니다. 예컨대 경실련이 진행했던 하나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SNS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가볍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게시할 칼럼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설맞이 SNS이벤트를 열기 위한 표지 제작, 청년 대상 인터뷰 참여 등 홍보팀 직무와 맞물려 20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20대인 저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업무들을 통해 평소에 듣기만 했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들을 깊이 있게 알고, 그에 따른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평소 재미삼아 해왔던 SNS 활동이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어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식 인턴으로 근무하기에 앞서 다른 이들에 비해 갖추지 못했던 점들이 많아 걱정과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 담당 간사님께서 무작정 제게 업무를 지시하시기 보다는 함께 의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팀별 간사님들의 교육 시간을 통해 각 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알고, 그로 인해 어렵기만 했던 경제 및 사회 분야에 관한 지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시작하기 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기대 하에 선택했던 경실련은 제게 그 이상으로 뜻 깊고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늘 부족했던 인턴이었지만,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짧은 2개월의 시간동안 많은 분들께 정이 들어 펍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 1. 아버지 축출의 시대

문학평론가 이남호 씨는 1980년대 시단의 특성을 「아버지 축출의 시대」라고 불렀다. 광주의 5월로 열린 역사의 참상을 방조하거나 침묵한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단죄의 한 방법으로서, 같은 시기에 등장한 해체파, 민중파 등 시인들이 기존 시학(詩學)의 형식과 내용을 파괴하며 아버지를 공격, 축출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여기서 「아버지」란, 시단에서 기존 질서를 상징하는 원로문인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원로로는 박두진, 서정주, 김춘수 시인이 있었다.

## 2. 박두진의 시대정신

청록파 시인 3인 중 한 사람인 박두진(朴斗鎭, 1916-1998)은 다른 청록파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적 고향은 다름 아닌 자연이었다. 다른 두 청록파 시인들의 자연은 목가적 삶이나 당대 농촌의 현실을 환기했던 것과 달리, 박두진의 자연은 강한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의 자연은 정치적 억압과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판적 모티프(백락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가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소수와 그리스도

인들의 자의식과 관계된 일이기도 했다. 80년 이전 그의 초기 작품 〈해 (1949)〉에서처럼, 자연의 순수와 자유 그리고 생명을 찬양하는 데 전념했던 것이어서, 적어도 시적 정의를 표상(表象)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항적 모티브(동기)의 색채가 선명하게 들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광주의 5월로 열린 후기 작품들은 변화된 시대상과 더불어 자연에서 벗어나 정치·사회적 내용을 담아냈고, 그것은 초기에 잠재돼 있던 그의 자의식으로부터 포착됐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박두진의 작품 〈불사조의 노래 (1987)〉는 대중들의 관심 밖에 머물렀던 당대의 탈진실을 일깨웠고, 가장 직접적이고 신랄하게 정치적 저항의 모티프를 보여준 작품활동으로 평가 받는다. 박두진의 시에서 80년 전후의 현실 정치나 사회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의 작품속 시적 정의는 시대적 요청과 종교적 소신, 그리고 도덕적 판단에서 비롯된 인식의 소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3. 서정주의 민중언어 속에 녹아든 죄책감

동시대를 살아온 시인 서정주(徐廷柱, 1915-2000)는 대부분의 한국 현대 시인들이 그러하듯

이 그 역시 낭만주의 시인으로 시작했다. 여느 시인들과는 다르게 그의 낭만주의는 격렬한 것이어서, 그의 기질은 추(醜)의 미를 추구하는 데카당스(퇴폐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래서 서정주의 영감은 한편의 샤를 보들레르(Charles P. Baudelaire)와 같은 프랑스 시학과 같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불교와 무적 신앙(샤머니즘)의 전통이었고, 또 민중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서정주에게 리얼리즘이 있다면, 그의 작품활동은 박두진이나 여타 다른 시인들처럼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에 의해 개념적으로 포착되었던 사회상이나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공유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과 문화, 언어 양식에서 포착된 뉘앙스(어감)의 차이와 반복으로부터 드러나는 일상생활의 살아있는 정서를 표상하는 작업과 같았다. 바로 이 점에서 서정주를 한국의 현실로 돌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의 낭만주의는 처음부터 단지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관념이나 이상(異常)의 문제와 달리 격동의 시대에 내던져진 이들의 실존적 삶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속 그의 친일반민족 행위나 종교적·도덕적 타락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서정주의 작품활동에 대해서 특정 주제나 모티프에 따라 평가하기 보다는, 우리가 직접 한 편의 시를 직접 마주해 봄으로써 그 기질을 직관하는 것이 공평하다.

비록 <보들레르의 묘에서 (1979)>는 군사정권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세계를 방랑한 그의 한가로운 여행담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서정주 특유의

유머를 가지고 약술된 작품들은 80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운명의 명예와 순응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이자 알레고리(수사적 은유)였다. 식민 통치와 해방, 유신정권의 시대를 마주해야하는 민중의 삶은 그동안 공허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그의 작품속 삶의 애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서정주의 작품활동은 높은 서정성과 일상 언어의 끈끈함으로 80년 시대의 현실을 버티고 있었다.

#### 4. 이데올로기 공포가 만들어 낸 김춘수의 무의식

무의미시론의 대표시인 김춘수(金春洙, 1922-2004)는 개인적 정서의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시대,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과 1960년대의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경험되는 고통과 비애에 속하는 감정의 표현이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김춘수에게 있어서 화석화되고 순화되어 형언하기 어려운 실존적 정서로 변형돼 피투(피동적으로 투영)될 뿐, 이러한 감정이나 정서는 철학적인 기율 속에 억눌려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초기의 작품인 <꽃을 위한 서시 (1957)>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정경 묘사이면서도, 고요함과 허무감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인간 생존의 전제에 대한 그의 철학적 판단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활동은 현실로 빛어진 내면의 개인의 고뇌와 실존적 위기를



◀ 198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벗어던지고자 하는 자신의 생을 구원하는 현실 도피의 길이기도 했다. <나목과 시(1959)>에서 그가 “이름도 없이 나를 여기에다 보내놓고 나에게 언어를 주신 모국어로 불러도 싸늘한 언어의 하나님”하고 말할 때, 그것은 이성을 향한 로고스의 세계를 갈구하면서도 이성에 의해서 포용될 수 없는 파토스의 비합리적 현실에 대한 실존적 불안에 피투되는 것, 그렇게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을 교묘히 표현했지만, 결국 그의 작품에 깃든 심상(心象)은 80년 전후 어려운 시대의 고독과 불안에 짓눌린 이데올로기의 공포로 인해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다.

한편, <처용단장 (1991)>의 제2부에서 그는 염불을 외우는 것으로 공포의 리듬을 탔다.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라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이것은, 그만의 “구원의 주문이었다”고 고백한다. 반복된 리듬, 현기증나는 긴장상태, 그리고 주술적 마취효과와 중독성. 순수하게 소리만 남아 울려 퍼지는 기표(記標)의 잔향 속에서 표상의 공백(무의식)을 피할

순 없었다. 김춘수는 결국 80년 세계의 침묵과 공포, 허무감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 5. 무엇을 읽을 것인가?

「아버지 축출의 시대」에 버림받았던 원로시인들의 작품속에서 구체적인 사회상이나 정치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관념적 언어 속에 기투(능동적으로 투영)된 도덕적·철학적 사유나 무의식의 심리상태, 그리고 작품활동의 전개과정을 직접 추론해 봄으로써 박두진, 서정주, 김춘수 시인의 시대정신과 죄책감, 80년 전후의 이데올로기 공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우리의 시학에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다면 “편모 슬하에서의 시쓰기 시대”에 거세당했던 홀아비 시인들이 추구했던 삶과 시대의 맥락을 이들의 작품속에서 읽어냄으로써, 이제는 화해의 시학의 길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세계는 인간의 길을 억압하지 못한다. ☺☺☺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

경실련을 비롯한 57개 시민단체에서 GMO 완전표시, GMO 없는 학교급식,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청원은 3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온-오프라인 캠페인이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어떤 식품이 GMO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영터리 표시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 승계 관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널뛰기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통계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됐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실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 ■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한다

기나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하는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대법관을 마치며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정경유착에 연관된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즉각 사임을 주장했고, 결국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단에서 사임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윤석호 | 경실련의 사업을 알아보며 선한 일들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수 | 밝은 오늘을 위해 작은 관심이지만 더하고 싶습니다.

정석원 | 땀땀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모두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mailto:news@ccej.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ice](https://www.facebook.com/ccejjustice)

전화번호 02-766-5627~5628



##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8. 02

02.01 • 4년간 물가보다 5배(강남10배) 상승한 아파트값이 진짜 문제다  
• [남북관계와 평화 · 통일 연속 토론회①]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02.02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 업역규제 폐지 환영하나 직접시공제 등 생산체계 개선 미진

02.05 • 부영의 동탄2 분양아파트 건축비 폭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02.06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6]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02.08 • 당장 할 수 있는 공공 후보양제, 정부는 지체 없이 시행하라  
• <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판교 공급의 역설① 집값은 더 올랐다

02.09 •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라  
•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 <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판교 공급의 역설② 개발이익 19조1801억원  
•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수용하라

02.12 • 문재인정부, 부동산 적폐청산 미루지마라!  
• <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판교 공급의 역설③ 주택이 재테크 수단으로

02.13 • 재벌 위한 영터리 표준지가격 여전히다  
• 최순실, 중형선고는 당연하다!

02.19 •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02.20 • 부영 부실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아파트 부실시공 전수 조사하라  
•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02.21 • 박원순 시장은 집값 ·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 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02.22 •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환영
-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02.27 •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 국회 근로시간 단축 의결,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02.28 • 경실련 헌법개정안 제출



2018. 03

- 03.02 • 공정위는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 경실련 공동대표 및 중앙위 의장 선출

- 03.05 •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웅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 03.06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7]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 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1.9조원(세대당 8천만원)
-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 03.07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한다
- [인포그래픽] 이산가족 등록 현황
- “가진만큼 세금” 2018 세법 개정 건의안 제출
-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문재인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투명히 공개하라



- 03.08 •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03.09 • 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기 마련해야
- 동탄2신도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 03.12 • 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 57개 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 03.13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8] 풀뿌리민주주의와 통장제도 폐지
- KAIT는 이익단체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하라

- 03.14 • 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 03.15 •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 03.16 •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 농산물 적정가격
-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 03.19 •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03.20 •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연속 토론회①]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

- 03.21 • 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03.22 • 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 국회도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 투명하고 철저히 조사하라

- 03.23 •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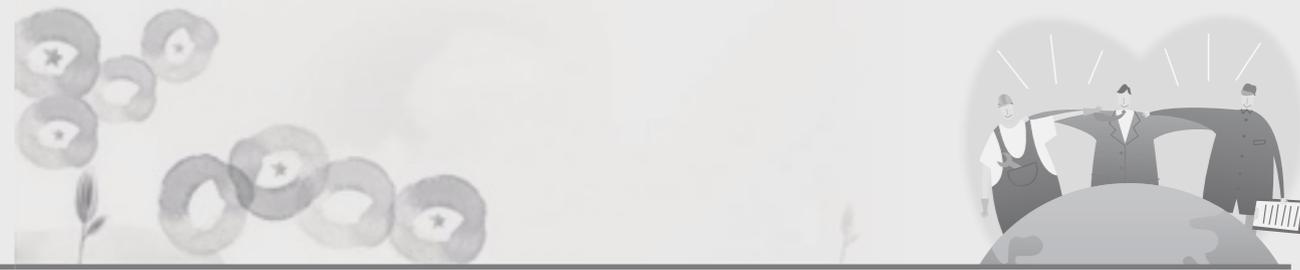
- 03.26 •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모집
- 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법조인 452명 공동성명

- 03.27 • 국민은 개헌을 원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시작하라
-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 03.28 • 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9]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 03.29 •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5.24조치 해제에 나서라
-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 03.30 •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토건세력 대변인 노릇한 정부와 관료, 말로 하는 반성보다 정책변화에 나서라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 116명, 가입일 : 2018년 1월 27일~2018년 4월 2일)

(주)중부컴퍼니	권의경	김상호	김쾌환	박성수	백명숙	손성배	안현석	유민채	이영주	정세자	최성배
강승구	김경호	김세화	김형근	박승자	백종덕	송주섭	양승주	유상진	이정숙	정은희	추우성
강승연	김권수	김송식	김희경	박영준	서은정	송창식	에스지이(주)	유창범	이종철	정종길	한연수
강예달	김기만	김순옥	나상철	박우용	서현주	신용우	여남권	육준혜	이홍범	정희진	허남두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김덕은	김영석	남연심	박유정	서해숙	신현농업	영경수	윤경수	임정애	조만행	허성우
고봉철	김도영	김재원	노효길	박재원	실조영	협동조합	영경수	윤석호	임진택	조병길	황규철
고성일	김동진	김종기(2)	대성운수	박종국	성념의료재단	신혜영	염은식	윤숙자	장승모농협	조치경	황재각
고재홍	김무룡	김창선	맹경숙	박중석	성만호	심재식	오해란	이명춘	장운	주식회사 팜펠리아	
고태선	김봉섭	김철수	민병권	박해순	성승규	심재원	오희택	이반석	장해철	지영호	
권오식	김상민	김충효	박명은	박희자	성환웅	심현창	유남숙	이영범	정석원	천병훈	

중앙경찰서	강해정	구영미공동체협동조합	권일민	김광훈	김동영	김병재	김성래	김양진	김용하	김일수	김종록
	경규현	구성찬	권준기	김국주	김동우	김병주	김성수	김영대	김용호	김재구	김종목
강내원	경민수	구수정	권준석	김규범	김동욱	김병주	김성수	김영미	김우비	김재구	김종민
강대수	계충미	구은경	권준우	김규영	김동울	김병철	김성수	김영섭	김우영	김재길	김종배
강덕순	고강석	구자범	권찬	김근수	김동호	김병학	김성욱	김영순	김원석	김재성	김종찬
강두현	고경일	구찬희	권철민	김근철	김래관	김병호	김성일	김영실	김원재	김재열	김종혁
강마아	고성순	권경우	권혁근	김근초	김만기	김보경	김성종	김영은	김원태	김재일	김주규
강명구	고영일	권규향	권혁민	김금숙	김만수	김보라미	김성철	김영일	김유룡	김재하	김주목
강민구	고영희	권기대	금동섭	김공태	김명균	김복환	김성태	김영재	김유진	김재홍	김주영
강병철	고윤	권기범	김갑수	김기숙	김명기	김봉진	김성필	김영주	김유찬	김재화	김주영
강선미	고은주	권동현	김진호	김기열	김명임	김사길	김세정	김영준	김유환	김재환	김주종
강성일	고은진	권득용	김경낙	김기태	김명철	김삼철	김세준	김영준	김윤기	김장국	김주현
강성중	고지석	권만열	김경모	김기환	김명호	김상경	김세진	김영철	김윤두	김정돈	김준
강은현	고지숙	권봉철	김경배	김길락	김명환	김상균	김소라	김영철 (일하스님)	김윤석	김정민	김준배
강일환	공병욱	권삼웅	김경생	김남덕	김무준	김상덕	김송식	김영출	김윤섭	김정석	김준식
강주현	공양석	권상현	김경수	김남수	김문환	김상영	김수영	김예송	김용	김정수	김준영
강지영	공정표	권순범	김경수	김남언	김미진	김상우	김숙희	김예은	김은경	김정욱	김준호
강창걸	공진하	권순식	김경아	김남훈	김민수	김상희	김소득	김원래	김은경	김정원	김지연
강창구	곽기훈	권순용	김경준	김대균	김민연	김생수	김승보	김원배	김은섭	김정현	김지영
강창균	곽복률	권순탁	김경철	김대선	김민정	김서현	김승우	김원욱	김은영	김정호	김지혜
강철	곽새별	권영준	김경호	김대성	김민주	김석환	김승하	김용남	김인근	김정호	김진
강철규	곽의영	권영진	김경환	김대중	김병각	김선욱	김승현	김용섭	김인봉	김정호	김진경
강철승	곽지용	권오진	김관영	김대진	김병구	김선필	김시연	김용숙	김인숙	김정훈	김진구
강태철	곽효석	권용습	김관용	김대현	김병수	김선희	김시원	김용술	김인영	김제후	김진만
강태호	곽희남	권용희	김광배	김대호	김병수	김성균	김양규	김용식	김인철	김종근	김진명
강현신	구경이	권윤정	김광수	김대훈	김병수	김성달	김양수	김용철	김인태	김종덕	김진섭

김진수	김하나	남기원	민병욱	박선희	박의용	박태선	변수원	손승태	신정무	양석영	유경희
김진아	김해성	남상권	민선욱	박성배	박인선	박태순	변재근	손재운	신지영	양성범	유관영
김진현	김현동	남원호	민수영	박성수	박인수	박태영	변창우	손재근	신철영	양세영	유기석
김진화	김현석	남재걸	민희숙	박성용	박재갑	박한용	서경호	손정아	신태현	양연식	유기천
김진호	김현성	남현주	박건영	박성혁	박재성	박행우	서병섭	손종보	신현호	양용배	유기창
김찬동	김현수	남호원	박경서	박성호	박재익	박현진	서순탁	손호중	심동준	양원표	유기현
김찬석	김현정	노병영	박경준	박성훈	박재천	박형근	서영덕	손희준	심영숙	양유정	유남식
김찬형	김현정	노상현	박광태	박세권	박재희	박해란	서원석	송기민	심인석	양윤숙	유덕열
김찬호	김현철	노연경	박광현	박세원	박점수	박호걸	서윤석	송다경	심정환	양인준	유동진
김창균	김현희	노우성	박기서	박세중	박정교	박호영	서은경	송덕원	심진섭	양창우	유동호
김창범	김형규	노재원	박기영	박수형	박정민	박화영	서정일	송미영	심종진	양재열	유록수
김창식	김형균	노재훈	박기철	박순기	박정석	박후근	서정화	송병록	심혜정	양태훈	유명진
김창영	김형조	노정호	박기훈	박승배	박정식	박훈	서종대	송수영	아름다운의원	양혁승	유승
김재윤	김형준	노진주	박남규	박승상	박정표	박희권	서종철	송연미	아세아문화사	원원중	유승중
김천	김형진	노창수	박노건	박승욱	박재화	박희령	서직원	송용석	안경숙	여수정	유애지
김철	김형표	노희철	박달현	박승진	박종근	박희선	서한송이	송원기	안규창	여해경	유연삼
김철주	김혜경	리윤홍	박동렬	박시근	박종선	박희연	석기영	송인섭	안기영	염규석	유연식
김철호	김혜숙	류시문	박두영	박양제	박종소	박희진	석철수	송인운	안기정	염진형	유인상
김철홍	김혜순	류양석	박명환	박영규	박종우	반영철	선동수	송인철	안병억	예광복스	유인환
김철환	김호	류종렬	박미나	박영규	박종원	방상윤	선우인태내셔널	송재경	안병준	예병렬	유일용
김충환	김호	류지성	박미라	박영기	박종원	방정혜	선종국	송하중	안영훈	오경준	유재경
김치수	김호경	류형욱	박미선	박영남	박주은	방종수	설원식	송하복	안환용	오길영	유재민
김태균	김호경	류회근	박민수	박영민	박준수	방효창	설창인	신동민	안용식	오상준	유재욱
김태균	김호균	마경화	박민준	박영민	박종철	배병달	성광식	신동애	안인화	오세정	유재혁
김태수	김호성	마미영	박민진	박영수	박지원	배보현	성금성	신동엽	안재경	오세호	유종성
김태수	김호식	맹경숙	박병오	박영웅	박지혜	배영환	성병화	신동조	안정혜	오순택	유진상
김태완	김호연	맹성렬	박병일	박영철	박지호	배유아	성신	신동진	안종범	오승훈	유평준
김태진	김홍규	문경식	박상중	박영환	박지환	배인명	성외경	신두철	안종한	오용식	유해신
김태현	김홍업	문광기	박삼희	박영훈	박진순	배장동	성욱진	신봉기	안지현	오장환	유향임
김태현	김효선	문상준	박상대	박용석	박진아	배장수	성윤숙	신봉진	안진걸	오제명	유혜영
김태형	김효원	문석진	박상렬	박용정	박진호	배종석	소경섭	신상준	안철원	오중현	유호성
김태형	김희연	문세영	박상성	박용제	박진홍	배천호	소진성	신상진	안현구	오창훈	유희동
김태호	김희철	문소상	박상인	박용준	박진홍	배홍진	손건일	신선철	안호정	오현석	유희숙
김태호	나권일	문인섭	박상현	박우석	박창욱	백경아	손기훈	신영철	안희숙	오현철	윤건수
김태훈	나기열	문장협	박상현	박원규	박창임	백요한	손무길	신영철	안희정	왕진산	윤경숙
김태훈	나병현	문자호	박상형	박원석	박철수	백정숙	손봉호	신원기	안희철	원동환	윤득구
김평진	나상민	문태현	박서희	박윤수	박철주	백종우	손상석	신용준	양광희	원영진	윤명
김필관	나순팔	문현국	박석순	박은아	박춘건	백진현	손성국	신우현	양대규	원재환	윤상균
김하양	나일주	문현정	박석현	박은현	박춘호	변동철	손성일	신은정	양동호	원종호	윤석호
김학수	나준희	민남미	박선규	박용순	박치우	변상해	손세욱	신인철	양두석	원혜영	윤숙자



윤여림	이근태	이상철	이원관	이준영	임영환	전기호	정영욱	조강희	지정희	최원천	하재현
윤영곤	이근환	이상희	이원식	이지영	임용기	전대홍	정왕규	조건영	진영수	최유영	하현아
윤영천	이금희	이석규	이원재	이지훈	임웅찬	전병순	정용수	조경민	진원석	최윤재	하현진
윤은선	이기승	이석기	이원재	이진경	임장원	전병식	정용화	조광현	진유식	최은식	한국언론진흥재단
윤은주	이기우	이석범	이원희	이진영	임재환	전봉양	정운수	조광희	진중화	최은진	한상윤
윤인오	이기용	이석제	이유열	이진원	임정규	전봉진	정원철	조규홍	차상열	최은철	한상일
윤일성	이기호	이석진	이윤규	이창엽	임종필	전상룡	정원희	조민상	차은상	최인숙	한상훈
윤재석	이낙원	이선신	이윤배	이창효	임침빈	전상용	정윤영	조병익	차진구	최인호	한석웅
윤정섭	이남경	이성구	이윤상	이창희	임태영	전상욱	정윤채	조성하	채대영	최일	한선아
윤종길	이디혜	이성근	이윤선	이철우	장경완	전성철	정의호	조성희	채민성	최장원	한성철
윤종빈	이대열	이성민	이윤호	이춘수	장경태	전영진	정익훈	조성훈	채예정	최재용	한소람
윤종식	이대영	이성복	이은재	이충현	장권	전용배	정인호	조성희	채원호	최정욱	한승구
윤지원	이덕영	이성형	이의영	이태영	장동민	전용일	정일용	조순열	채홍석	최정표	한승호
윤진철	이덕희	이소영	이인영	이태용	장두호	전우영	정임식	조순홍	천민승	최종일	한승호
윤창원	이동석	이승수	이일권	이태진	장문호	정경욱	정재영	조승환	천병우	최준용	한연하
윤한필	이동석	이수연	이재길	이하인	장미은	정광화	정재은	조연성	천세완	최준혁	한영관
윤효상	이동엽	이수영	이재길	이학수	장민수	정덕임	정재진	조연정	최광규	최종길	한용환
음유정	이동주	이숙희	이재욱	이학용	장병호	정동영	정정래	조용기	최광용	최종민	한태경
이갑수	이동한	이순기	이재완	이한길	장보름	정만중	정정호	조은호	최광현	최지한	한홍열
이갑수	이동호	이순배	이재운	이한민	장석림	정맹훈	정제용	조일흠	최근현	최지훈	함도용
이강운	이만호	이순용	이재은	이한범	장석춘	정명채	정종원	조재연	최기환	최창배	함동균
이건호	이명진	이순한	이재임	이행섭	장승진	정미화	정주연	조재호	최다니엘	최창호	함두호
이경락	이명천	이승근	이정규	이현미	장심영	정병순	정준수	조정근	최덕천	최철호	함형욱
이경수	이명훈	이승대	이정남	이현재	장영식	정병오	정중식	조충철	최덕호	최철호	허남중
이경숙	이모세	이승섭	이정성	이형세	장영오	정병철	정진민	조주희	최명희	최철화	허동일
이경우	이봉숙	이승우	이정행	이형일	장영환	정삼룡	정창룡	조준범	최민	최혁	허병권
이경중	이봉형	이시연	이정현	이혜숙	장욱	정삼미	정창운	조준형	최병오	최호영	허석
이경태	이봉훈	이신호	이정후	이호경	장원규	정석원	정태근	조진만	최봉문	최홍엽	허수범
이경필	이상열	이애화	이정희	이호섭	장원택	정석희	정태명	조진수	최석준	최희수	허원철
이광섭	이상룡	이영란	이정희	이호욱	장유리	정선철	정태성	조진오	최성수	최희수	허정준
이광열	이상범	이영범	이중규	이화주	장유환	정선혜	정태완	조철제	최성실	최희준	허중호
이광택	이상복	이영음	이중길	이훈	장은미	정성남	정택수	조현성	최성주	추동균	허지영
이광필	이상봉	이영종	이중민	이희중	장재영	정성봉	정필성	조현익	최성현	추우성	형성훈
이광현	이상엽	이영호	이중수	인치승	장중철	정세진	정하용	조형준	최수만	크레텍책임(주)	홍광선
이규용	이상엽	이용근	이중열	임건목	장찬홍	정세훈	정혁제	주상희	최수진	판문	홍대식
이규철	이상우	이용만	이중윤	임명호	장철기	정승상	정혜승	주인권	최승섭	프라이머디스트레주	홍도천
이규혜	이상윤	이용배	이중창	임상혁	장형환	정승준	정혜승	지동섭	최승우	하상준	홍미미
이균성	이상윤	이용선	이중희	임서구	장해령	정승화	정희성	지동익	최영식	하용호	홍성균
이근식	이상진	이용승	이주하	임성희	장홍석	정연섭	정희창	지영근	최은아	하윤진	홍성환
이근조	이상진	이운향	이준모	임세은	장희곤	정연욱	조강훈	지영석	최원영	하재연	홍순영

홍승우	문인철	김세용	이양재	김택성	김성호	이종수	김선연	이은주	강창수	김효일	신미애
홍영희	박상안	김영	이유미	김현아	김용현	이진만	김선정	이정임	강학도	나기석	신부연
홍오성	백승호	김재령	이은재	나태균	김은수	이현희	김재부	이재영	경명자	나양주	신용호
홍종학	백종효	김재익	이재문	대호관세사법인	김장철	이화용	김재준	이주석	고영주	남기원	신찬숙
홍종화	성호준	김종길	이정식	박병식	김재기	임홍승	김정근	이지은	권대용	남덕희	심재국
홍준표	손창민	김준현	이정아	박인동	김재원	장인석	김진숙	이지아	권민호	남원식	안미나
홍준현	송운학	김철홍	이제선	서경수	김정웅	장형원	김진욱	이효숙	기산종합건설(주)	남희정	양끝선
홍진구	여은미	김태호	이주희	신희권	김정진	전귀정	김태희	임명희	김경덕	노승복	엄수훈
홍창기	윤언철	김형욱	이창수	심재원	김정현	전미옥	김학근	장선애	김경섭	노재남	여남권
화강윤	이덕호	김호현	이현주	유주상	김종구	전영선	김형경	전규화	김경수	노재천	여정애
황경복	이승훈	나인수	이희승	이대순	김주호	정동욱	김형근	전방욱	김귀호	노재하	염경수
황광열	이혜란	노두승	임경수	이덕우	김창석	정승훈	김황식	전영권	김기만	류금렬	오성관
황기명	임효창	노용래	임영희	이명근	김태환	정창현	노영성	정광민	김대봉	문상필	오성주
황도수	정길채	도선봉	임형백	이순기	김학성	조광환	박상덕	정석중	김민수	박광호	오순혜
황민호	정홍준	류성룡	장영진	이영길	김형만	주석부	박윤남	정세환	김상기	박대기	옥근호
황선영	천미림	류중석	전은호	이지연	노귀남	차승주	박인재	정의호	김상일	박명욱	옥방호
황선용	최재윤	민병기	정성훈	이진	당명숙	최우진	박지호	정의훈	김석준	박성호	옥춘금
황선원	하능식	박경남	정애리	이창수	문행규	최평규	반태연	조무현	김선심	박수정	옥충석
황영미	홍창시	박상위	정인환	이태호	박경서	최호창	배정순	진수환	김성진	박순옥	옥혁수
황유경	황은경	박성우	조돈철	장영	박금해	추재훈	서은주	최규천	김세린	박애숙	우정숙
황이남	황정호	박연환	조우현	장윤정	박성극	한광수	송문길	최복규	김수현	박용안	원소실
황이숙		박영웅	조재형	장진영	박은주	한정훈	송민석	최송길	김승권	박인근	유차상
황인구	도시개혁센터	박재호	최강림	전종찬	박준우	한준구	송재석	최소희	김승한	박추홍	유천업
황인선		박정운	최두호	정경수	박준형	홍명근	신미영	최승룡	김영우	박태원	유태영
황인찬	고일두	박찬우	최명철	조영관	배인교	황대중	신승춘	최우현	김영화	반영진	윤강원
황정국	공병준	박희정	최윤정	추승우	배종근		심규만	최은승	김옥희	배기수	윤길정
황철진	곽도	배용규	최정우	하성용	서관승	강릉경찰서	심윤보	최종문	김용운	배동주	이광재
황현석	곽충삼	서민호	하동익	송정호	심재상	한동준	김원용	백세정	이명화		
황호식	권영진	서순탁	합승희	통일협회	신영욱	고석태	심현섭	한성림	한성림	김장이	백순환
황호열	권일	신행숙	허도한		신종성	고재정	양창훈	홍용표	김정수	백승일	이산학
황훈주	김경희	심재민	현철재	강만성	안춘훈	구광범	원경숙	홍진원	김중태	서주중	이상귀
황희정	김광만	심준신		강은석	위정희	권상동	윤도현		김중현	서현주	이상천
	김금옥	양우현	시민권익센터	고석주	윤영전	권오석	윤성원	거제경찰서	김철관	성만호	이양식
경제정의연구소	김기성	오세형		고유환	윤태룡	김남두	윤순모		김창집	성화용	이외자
	김덕기	윤재용	김강준	곽일환	이기자	김남영	이광중	강경수	김중곤	손성미	이은경
	김명철	김도영	이동근	김상헌	권수복	이승규	김덕기	이귀녀	강성배	김판열	손은희
	곽수근	김동식	이만희	김석기	김근식	이우영	김동명	이규송	강윤영	김판희	손정식
	김지환	김미경	이명수	김영미	김동규	이재선	김만재	이숙희	강정숙	김필성	손진일
	김혁	김석기	이병준	김태경	김병조	이점호	김봉래	이요한	강정호	김한기	송오성
	노영록	김성수	이상협	김태룡	김삼수	이정우	김석래	이윤일	강지은	김현호	신미경



이철용	강윤숙	김영필	박기은	서삼례	우해정	이정희	주태진	고근	김정훈	박창기	양현인	임기춘	지병근	길호양	박재욱	이창형	심규만	최경용	신영소	허우섭	김도형	김태환	서정걸
이현길	강주례	김용관	박명은	서순자	원범재	이중석	지미선	고려가스(주)	김지인	박창수	양혜령	임동훈	지현도	김경훈	박정구	이태동	홍관표	최종식	신상천	홍석만	김도형	김해철	서종철
이형로	강찬호	김윤길	박문경	서용원	유수연	이필상	진정호	고려가스(주) 광주	김창재	박창현	엄창수	임성태	차현승	김귀화	박정훈	임은기	홍기원	허수진	심상용	황인문	김동석	김현수	성영락
장길호	강희규	김원선	박미경	서유리	유흥우	이현우	차성미	고영삼	김철현	박철웅	여상구	임숙경	채인기	김낙관	박주영	임주석	한성수	심영섭	황인순	김동철	김현조	성윤상	
장석주	고영원	김윤권	박미영	서은경	윤승형	이혜수	차정운	고형석	김해룡	박태규	오경례	임영범	천재영	김도형	박현우	장기태	군포경실련	호희국	안철환	김영수	김효진	손광락	
전갑생	고완철	김윤옥	박미정	서이석	윤종미	이혜진	최경화	공수현	김현	박형철	오미정	임정훈	천형욱	김동욱	박형진	장문석		양영재	대구경실련	김영혜	나영희	손상호	
전기풍	고재원	김윤재	박미정	석학주	윤철	이혜진	최문교	구희선	김현모	배백호	오지혜	임정휘	천홍서	김문환	배상길	장세광	국정아	김포경실련	어중석	김무중	남동강	손상흠	
정보건	고형복	김윤호	박미화	성인숙	이강순	이호석	최미근	권충화	김현석	배용태	오지홍	임중연	최영남	김보준	백승국	장연덕	권영훈	오미애	(주)남캐리캐이스트	김민한	남동현	손승완	
정석윤	곽도훈	김은진	박민관	손선주	이건복	이호열	최미영	기우태	김현중	백석	오치홍	임한필	최용석	김봉교	변창우	장종길	김대옥	(주)신원렌터카	오홍미	(주)달구벌버스	김민희	남윤환	손원기
정선우	곽병미	김재성	박민영	손솔이	이금숙	이효성	최상철	김경미	김현철	백익순	유방실	임현철	최윤정	김성만	성병근	장준우	김동별	강명자	웅심이칼국수 (주)대구백화점	김미화	남민철	손효진	
정인식	곽은	김정	박복임	송경섭	이기영	임삼례	최영자	김경원	김효중	백중기	유영표	임형채	최정구	김연고	성중운	장흔성	김동조	김남규	원용벽	(주)대구은행	김민석	노광해	송상수
정종화	광명상공회의소	김정숙	박상윤	송금옥	이길숙	임진희	최재석	김경현	나미영	버스조합	유현	임형철	최주영	김요나단	소평진	전윤한	김석현	김두관	유영록	(주)명덕건설	김병규	노영희	신동기
조승재	구교형	김정자	박서윤	송혜선	이로사	장선	최철규	김광영	나병철	변동철	윤두중	장익수	최진규	김은희	송철원	정제봉	김영희	김미자	윤명자	강연환	김상진	대구백화점(주)신영남산업주식회사	
조오현	구차환	김종임	박성국	신기람	이말복	전광섭	추규호	김기보	나성영	변원섭	윤봉란	장익	하주아	김은희	송철원	정제봉	김영희	김미자	윤명자	강연환	김상진	대구백화점(주)신영남산업주식회사	
조치경	권순남	김종진	박성배	신동렬	이명숙	전종석	티제이티(주)	김길현	나홍덕	변재영	윤봉영	장휘국	한명석	김용중	신미정	정진수	김중수	김영로	윤미숙	경희창	김상호	대구도시공사	신영섭
조하영	권혁이	김진경	박승원	신민선	이미경	정도환	하숙례	김남수	노희정	서민호	윤원찬	전홍모	한샘	김인순	신주식	정택균	김창호	김옥순	이경화	계양엔진종합상사	김선완	대구상공회의소	신원훈
지영배	김경태	김진숙	박영훈	신복인	이미희	정민정	한금희	김덕은	류한호	서상기	은광석	정강택	한신구	김재욱	심재필	정택동	박정민	김용훈	이경희	공영선	김선희	대성에너지(주)	신홍권
진성우	김경표	김진일	박옥남	신선영	이병렬	정병오	한상미	김동욱	모현숙	서상기	이기만	정두숙	한희주	김재훈	심정규	조경래	박충수	김종열	이기형	공재식	김성수	동영건설(주)	심병철
최삼주	김경화	김학준	박은경	신성은	이병순	정상영	한윤선	김동현	문병규	서수연	이길남	정병호	허기석	김중배	양진오	조재형	박평식	김준현	이두열	곽덕환	김세화	류규하	심준섭
최선종	김기영	김현정	박재철	신숙진	이병철	정선유	한홍기	김문수	문정찬	서재형	이동민	정상문	허문수	김종욱	엄상섭	주광정밀(주)	박희찬	김진희	이부형	곽동주	김신호	맹일영	안영석
최운용	김남권	김현정	박재희	신영옥	이복자	정애숙	허기용	김미남	문혜옥	서정훈	이명구	정용완	허성태	김종을	오경숙	지대근	석경수	김창집	이재홍	구성호	김영권	문인수	안학석
최윤숙	김남현	김현희	박정선	신윤철	이부순	정유석	허정호	김병철	박광복	서해자	이봉주	정원태	홍영신	김준희	오영재	최근애	송정복	김철경	이정규	권기억	김영모	문효상	양우준
최정환	김남희	김혜정	박종기	신은숙	이상봉	정은영	허정은	김보현	박남규	선종아	이상길	정윤남	황덕자	김진익	유준호	최낙렬	심상선	김형창	이정수	권대우	김요한	박경욱	양원규
한은진	김다솜	김호숙	박종미	신혜정	이석석	정인애	허창순	김상국	박미정	설상욱	이성각	정은수	황동현	김진희	윤달근	최선호	심재숙	남기후	이종기	권동일	김용두	박동환	엄봉훈
한장용	김동범	김희수	박주한	신혜진	이성숙	정중환	홍은선	김성일	박병규	성인규	이성근	정일용	황보관석	김철광	윤상훈	최연호	안종호	남익선	이종준	권병훈	김용찬	박병석	엄인용
허추구	김동진	남기표	박준서	심상록	이성진	정지선	홍진호	김수영	박병일	소범환	이성길	정찬용	황윤용	김현미	윤종석	표상욱	양해택	도현순	이호	권오숙	김용철	박병준	에스제이건설(주)
허희경	김미란	남윤화	박진석	심혜진	이승재	정진우	황동식	김순재	박상원	손점식	이승노	정해경	황인창	김형균	이관순	하영백	유애순	류문식	정일환	권오준	김윤호	박병호	여우현
현정임	김민재	노병일	박춘선	안경애	이승규	정찬규	황인란	김영규	박성수	손희정	이연	정해련		김휘연	이덕수	허진	이경은	류승범	정희상	권운집	김인규	박승철	영신건설(주)
홍성태	김법운	노신복	박태준	안석모	이승봉	정학균	황재연	김영길	박수인	송광운	이은방	조경록	구미경실련	김효진	이명숙	홍인수	이상운	문태식	조승현	권태윤	김재범	박영식	오경학
황분희	김봉화	노용래	박형근	안철환	이양희	정해경		김영남	박양우	송원식	이인수	조광득		김희진	이명희		이상춘	문현미	조영철	권택중	김정렬	박은영	오철환
황점득	김상열	노혜숙	방소현	양금석	이언주	정희균	광주경실련	김영채	박영덕	송윤주	이재석	조교영	강명천	김희철	이미경	군산경실련	이석진	민경환	조용문	권취동	김중웅	박재열	우동락
황한성	김선호	노희준	배권식	양기대	이연숙	정희진		김영현	박옥란	송형일	이재윤	조선익	강승수	나영란	이미숙	이선덕	박광근	조용식(명신회의원)	길성민	김종태	박종률	우형택	
황황욱	김성자	류경희	배준	양승오	이영신	조범상	(유)용진에너지	김영환	박용수	신은희	이정근	조성식	강신웅	나호훈	이상도	강왕근	이유설	박만호	조종석	김강식	김종태	박종익	유성근
	김소윤	류미숙	백명숙	양정현	이영희	조상희	(주)대한가스산업	김용태	박웅	신재안	이정량	조인형	고영호	노상진	이성철	고계곤	이종암	박병동	권재현(주)대원건설	김근식	김지현	박종철	유성호
광명경실련	김수연	류정희	백정순	양철원	이원영	조아라	(주)영암마트	김인수	박이화	심재훈	이정주	조재곤	구지근	라병희	이영애	고덕영	이희재	박연희	채신덕	김경민	김진호	박준상	유영역
	김수진	마이인	변미애	오명희	이윤식	조은하	(주)해양도시가스	김일술	박정열	안병주	이정학	조현지	권구일	박성도	이원재	김부영	임구원	박영훈	최영미	김남훈	김창수	박한승	유영환
강성철	김승복	민찬식	변성수	오민석	이은경	조태섭	강신주	김일호	박종근	안현석	이종성	조형수	권보	박성표	이원희	김영혜	전균섭	박정원	최재용	김대식	김천일	박해식	유양근
강신재	김애란	박경옥	변한주	오성남	이은영	조해성	강은섭	김재석	박종렬	양동윤	이종택	주경남	권순서	박순이	이정건	문경환	조용석	배건웅	한성식	김대진	김태선	배병두	윤태우
강옥영	김영근	박계량	서두원	우동훈	이은재	조화영	강정미	김재중	박준곤	양명희	이준영	주호연	권윤택	박영주	이제수	박은아	조재용	백종일	한재혁	김도영	김태수	배은정	윤현식
강옥희	김영미	박광수	서방자	우병설	이재춘	조홍식	강현수	김재찬	박찬숙	양성호	이학균	지명순	길윤옥	박응도	이종률	성광문	차숙희	신광하	한해경	김도한	김태우	변부형	윤홍식



이강태	장재호	최종만	김기남	김태훈	신상헌	이인세	조항범	김경순	박광배	양명희	정영창	강민수(2)	김광식	김성열	김종구	남영현	박용한	서창우	신승균	오연석	이남기	이원경	임훈
이경민	장해열	최준호	김기범	김현조	신선호	이재민	조해형	김경욱	박근영	양승희	정진대	강민정	김길수	김성준	김종기	노경조	박재본	서현수	신영호	오지영	이남중	이위덕	장경식
이경애	장호경	최한석	김길순	김현하	신창호	이재영	주식회사 빅카스컴니	김경철	박문욱	양영주	정해수	강병석	김남식	김성태(2)	김종민	노상훈	박재욱	서현식	신유천	오철조	이덕식	이은화(2)	장귀봉
이경탁	장호열	하경태	김동선	김형태	신현진	이정(버리푸드)주식회사 세이디에스	김관욱	박석일	양판승	정호원	강병호	김남일	김성호(2)	김종한	노영욱	박재울	서해숙	신인철	오태석	이동률	이을찬	장다감	
이경화	전기택	하순화	김동철	김해천	신혜영	이장구	주식회사 한올에프엑스	김광배	박성일	어성준	조기석	강삼욱	김대래	김성훈	김주영	노일용	박재현(2)	서호영	신정희	옥성애	이동윤	이일용	장문숙
이근원	전명진	한국비철(주)	김명경	김홍숙	신희권	이중범	주옥규	김광창	박성진	오민정	조성익	강성태	김대중	김성훈(2)	김주현	노효길	박재홍	서호정	신철성	육진우	이동일	이재정	장문정
이기훈	전상훈	한상인	김명제	노경욱	신희영	이창기	주정봉	김대근	박세훈	오승주	조순형	강시명	김도	김성훈(3)	김주호	도한영	박정구	석승희	신해송	왕인	이동진	이재호	장봉주
이동기	전영권	한중해	김영주	남해비엔 호텔(주)	심영주	이철은	중도비엔 호텔(주)	김두영	박소영	오형열	조영교	강예윤	김동영	김수미	김주희	류강렬	박정숙	석진열	신항님	우명자	이동환	이정남	장선미
이미정	전영선	허인설	김병국	대전비엔 호텔(주)	안경래	이학재	진동규	김명숙	박송춘	원요준	조용호	강유동	김동호	김수빈	김준기	류위훈	박종덕	선석렬	신현무	우성철	이동훈	이정민	장성호
이병화	전재호	홍승용	김상환	도남선	안병진	이해정	진동섭	김명진	박순욱	유경생	조인수	강인중	김명석	김수자	김진	류은영	박종수(2)	설광석	신해숙	우정용	이동희	이정식	장용진
이봉우	전형수	홍승활	김성민	도로교통공단	안영찬	이현대	차정민	김명철	박송채	유광호	조준범	강정규	김명섭	김승주	김진영	류종성	박주원	설호석	심건해	유수윤	이만수	이정향	장윤석
이부용	정경선	홍화청	김성용	명율식	안재준	이현숙	최경호	김문재	박승욱	윤치술	차경아	강주하	김문규	김쌍우	김진찬	류진호	박진성	성병창	심미예	유영택	이명식	이정호(2)	장재구
이상록	정문정	황광석	김승일	문경재	안중훈	이형복	최경훈	김민희	박영용	이덕일	천현중	강중욱	김미경	김영길	김진필(2)	모삼선	박찬일	손병열	심상조	유안식	이미경	이정환	장준흠
이상천	정성윤	황병일	김양호	문정수	엄기운	이화영	최낙구	김보현	박용묵	이명희	최병기	강태문	김미경(2)	김영신	김진현(2)	문규성	박창식	손상용	심성구	유재기	이민호	이정훈(2)	장지태
이상필	정연욱	황정현	김영기	박근영	오세윤	임동표	최봉문	김성두	박인웅	이문희	최연식	강필원	김백철	김영욱	김창희	문상철(2)	박철중	손순용	심윤정	유재엽	이병기	이종남	장해욱
이상화	정영모	황종숙	김영모	박상훈	오원관	임윤택	최이성	김성철	박정석	이범수	최완수	강해상	김병근	김영욱(2)	김철도	문재천	박철한	손영일	심윤정(2)	유재중	이병준	이종석	장희정
이석형	정영은		김영주	박성원	오중섭	장복수	최장환	김수경	박정희	이병채	최일	강형숙	김병기	김영주	김춘덕	민지훈	박태주	손원우	심인섭	유정기	이병진	이종원	전보익
이선혜	정은숙	대전경실련	김영희	박성진	오창길	장인성	최정우	김승호	박종두	이상권	최재경	경규성	김병용	김영호	김태경	박경주	박한규	손정현	심형철	유정동	이병호	이종철	전선임
이수지	정은향		김영희	박영순	오학석	장인철	충남대학교병원	김신규	박종범	이성로	최종명	고명석	김병하	김옥분	김태구	박도영	박현욱	손창욱	이영아	윤강훈	이봉진	이종학	전세표
이연재	정인식	(주) 알루코	김욱	박종대	우금욱	장춘순	한경이	김영태	박종철	이인수	최호길	고순생	김보엘	김용섭	김태훈	박동범	박희영	손창우	안명석	윤경만	이상구	이주영	전용배
이용세	정재근	(주)경림엔지니어링	김원희	박종석	원용철	장형근	한국전력공사	김예영	박창수	이재광	최환석	고인홍	김복준	김용원	김태희	박미순	박희정	손치훈	안문상	윤경태	이상미	이주현	전우철
이윤호	정제영	(주)금성백	김은주	박준혁	유기완	장화식	한국수력자전거	김정민	박창윤	이정진	하상복	고재일	김봉국	김용필	김학진	박미영	방성애	송미경	안병록	윤기혁	이상백	이주환	전일수
이장수	정태안	조주택	김응배	박희조	유병연	전국진	한기평	김정아	박철수	이종화	한상호	고정연	김봉규	김원태	김해중	박민우	배광호	송순임	안연균	윤나영	이상진(2)	이준승	전진영
이재민	정해용	(주)동그랑	김인철	방명덕	유인규	전문학	한성림	김종숙	박한호	이찬식	한승주	공병승	김부근	김유경	김해영	박병만	배성훈	송원섭	안원하	윤동혁	이상득	이종하	전찬일
이재필	조광현	(주)마루농산	김재경	방정희	유인수	전영춘	한성숙	김종익	박해령	이천호	한태연	곽원병	김보이	김유석	김항남	박복용	배수미	송은주	안원호	윤상미	이상현(2)	이진수	전현수
이정웅	조락현	(주)나은행 흥행사업부	김재석	배동국	윤주병	전혁구	한화교	김종호	박혁진	이철수	홍건숙	구명중	김삼문	김윤영	김현욱	박불수	배용준	송재광	안재민	윤상현	이선희(2)	이진수(2)	전호열
이종경	조방희	(주)한미푸드시스템	김제선	백정웅	이건희	정병오	홍성연	김창세	박현희	이한경	홍국선	구주영	김삼수	김은숙	김현재	박상수	배혜래	송재은	안종일	윤석준	이성권	이정재(경성유업)	정광현
이지영	조용원	강다은	김중선	서동국	이계자	정상배	황의달	김태중	박홍식	이현중	홍근표	구효송	김상길	김은영	김형권	박석원	배화숙	송정숙	양대건	윤성미	이성열	이춘구	정권영
이진태	조인지	강영자	김중하	서영석	이광자	정상훈	황재익	김태현	배상기	이형오	홍석준	권명섭	김상배	김인한	김형균	박선아	백평호	송중두	양동열	윤수성	이성형	이학봉	정규용
이진현	조정학	강병규	김중학	서영완	이광진	정상희	황해정	김판조	박재봉	이형완	홍순길	권범현	김상욱	김장섭	김혜경	박성수	변재우	송종화	양시경	윤영태	이성환	이현민	정근
이진희	조찬호	강재규	김주홍	서재열	이범규	정승래		김하성	서이채	이홍성	홍진표	권성빈	김상태	김재명	김혜경(2)	박성철	부두봉	송종환	양은진	윤재성	이성훈	이현우	정기섭
이창건	주식회사 남원아이엔지 계룡건설산업(주)	김지윤	서정원	이병승	정우택	목포경실련		김홍석	송미승	임종석		권오성	김상호	김재일	김호범	박성희(2)	부산도시가스	신경근	양재화	윤재철	이성희(2)	이현제	정달식
이창용	주태환	고나현	김진숙	서준수	이상민	정은선		김희환	송영중	장미	부산경실련	권은경	김석준	김재찬	김홍재	박성훈	서경국	신군재	양종철	윤정현	이소정	이현주(3)	정도영
이해숙	지우	고태선	김창근	서홍원	이상일	정인구	(유)편의식생물산업단	노경윤	송진호	장종국		권재현	김석호	김정량	김홍태	박승제	서미화	신동욱	양종필	윤지영	이승우	이훈전	정동만
이형태	진연수	곽기용	김창숙	성기석	이승복	정현재	강병국	명근홍	송홍범	전종국	(주)경성에너지	권태섭	김선년	김정민	김홍휘	박시우	서범수	신동윤	엄세원	윤현철	이승호	이희길	정동열
이희영	차진근	구범림	김준길	손대근	이승용	정희대	강성태	문귀일	송희진	전철균	강경태	김가아	김선미	김정수(2)	김훈	박연수	서봉원	신만석	여재호	이강진	이영갑	임무진	정말순
임종오	최동학	권은남	김중신	송민호	이영수	조성천	강영태	문영덕	신관용	전철영	강규성	김갑환	김성권	김정숙	김훈태	박영봉	서수금	신병훈	오병루	이경학	이영신	임미정	정명길
장석희	최우곡	권철명	김태연	송영환	이용훈	조용석	강제석	민경준	신재범	정남준	강대영	김경일	김성근	김정순	김희곤	박영현	서양수	신상구	오상준	이귀순	이영호	임우택	정명식
장우석	최원아	금홍섭	김태현	송유숙	이윤숙	조용태	강주천	민찬홍	심재경	정명오	강미라	김경조	김성길	김정택	남경태	박용주	서은정	신상해	오상환	이규섭	이옥형	임종수	정명희(2)
장은숙	최은영	김금숙	김태호	송인걸	이윤형	조윤제	권인철	박강일	안영하	정승임	강민석	김경택	김성수	김정현	남기찬	박용하	서종석	신성환	오세룡	이규현	이용주	임호	정미경



정미한	조용한	최재영	고인선	김영호	박경자	신창승	이경상	이필순	최돈환	강미경	김종선	박형순	윤귀현	이주연	진승주	김성준	강기성	김종길	박홍래	이병욱	조민철	김동현	배만병
정민재	조유장	최재호	고종문	김응일	박근철	신현식	이경애	이현녀	최동권	강민철	김종오	박화진	윤두천	이주현	최문태	김종선	강수문	김지영	박희경	이선희	조안호	김명주	배연정
정상문	조윤득	최정묵	고현주	김원기	박덕희	신홍사	이관	이현미	최중훈	강인선	김중합건축사사무소	박홍덕	윤미경	이진성	최병정	김준영	강수진	김지훈	백영국	이숙경	조재기	김명해	백종덕
정성문	조윤환	최준식	공정관	김원일	박만용	심연흠	이기원	이호석	최서호	강창환	김준혁	배창수	윤석신	이찬용	최석환	김준호	경삼수	김창근	서정열	이숙란	주만수	김미란	서동일
정세자	조은정	최진욱	곽병용	김유경	박명종	심화섭	이대길	임시연	최성주	강학천	김지란	백해련	윤희경	이창모	최영숙	김지훈	고관	김창모	서해경	이양주	최경숙	김민섭	서시은
정순영	조종석	최철원	곽중환	김유리	박병훈	안경수	이대복	임정길	최승영	강희정	김진한	변영선	이경섭	이창진	최인수	김현덕	고미나	김창하	석진성	이옥희	최복수	김민정	서진숙
정순일	조준영	최혜경	길목	김은희	박상준	안국자	이돈섭	임종희	최애리	강희진	김충관	서상범	이경환	이편수	최인자	나창수	고영인	김철환	설점순	이용진	최영화	김선자	선유하
정신모	조지혜	탁영민	김 철	김인섭	박성진	안세준	이동균	장경민	최영미	고기준	김태학	서수정	이국희	이필근	최재훈	매일식품(주)	곽도훈	김초환	성준모	이용천	최운	김수은	성종규
정애니	조홍규	하상철(2)	김경석	김일환	박성한	안종석	이문규	장성원	최용석	고병억	김해영	서정근	이금희	이필근	최종후	박병희	곽태영	김춘호	송기범	이정미	최윤정	김순옥	송명원
정영점	조효제	하성훈	김경순	김재학	박세찬	안종원	이문성	장은선	최유정	구분숙	김현태	서정욱	이길영	이해균	최진학	박재현	권태근	김태훈	신남균	이정민	최임이	김양수	송애영
정용성	주수현	하순금	김계남	김정식	박수경	양언석	이문영	장재수	최중현	김경수	김해련	서환	이명욱	이현미	최진환	박철우	김경미	김해만	신동국	이정아	최재우	김연호	송영배
정용수	주안나	하주수	김나영	김정인	박승민	양영희	이미경	장재환	최지문	김경호	김효근	서홍석	이민구	이현순	최찬호	보성유휴(주)	김경민	김현삼	신병철	이주옥	최채림	김영선	송요찬
정은선	주재민	한기성	김남춘	김정훈	박영덕	양진옥	이병선	장주열	최진철	김도형	김훈	성기원	이범선	이호섭	허만호	비손이앤씨	김경숙	김현호	신윤관	이창수	최현수	김영학	송진원
정장한	지경아	한병우	김동수	김종담	박영희	양해준	이봉진	전용성	최춘파	김동선	나민수	성현구	이범주	이희수	하순진	서용현	김경애	김형욱	신정환	이천환	하은희	김영환	신권대
정재동	지은아	한병철	김동순	김종윤	박웅기	어주하	이상정	전이령	최택수	김동원	나태성	손성배	이병홍	이희숙	허창호	순천농업협동조합	김기범	김혜숙	신청하	이필상	하혜경	김은미	신도선
정재호	진동식	한성안	김말순	김주철	박정민	엄경선	이상호	정봉재	최형덕	김말순	남택진	손현미	이상명	임용순	한경수	신현일	김기희	김혜영	심규호	이해나(하용너)	한수연	김주남	신민희
정종학	진수진	한재철	김명섭	김준섭	박종갑	엄천수	이수영	정상철	최혜경	김미선	노종용	손혜정	이상애	임태정	한국지	영신창업투자(주)	김대일	김호득	양근서	이희대	현우경	김주원	신순봉
정종화	진효상	한중석	김미정	김진태	박종학	엄태영	이승재	정순희	최효섭	김미옥	도진욱	송원찬	이상해	임혜경	한상율	오정록	김동인	김화궁	양태호	이희연	형현호	김지혜	신승한
정지원	차동박	허민도	김병욱	김진태	박종현	엄재봉	이언우	정양언	추종권	김미정	명홍진	신동섭	이성호	장영욱	한옥자	위미영	김명연	나정숙	양현석	임명자	홍경남	김진영	신정원
정진걸	차동욱	허진욱	김부석	김진희	박종훈	오광택	이열호	정연미	탁동철	김민수	모성은	신지훈	이성희	장성근	한창균	이상휘	김명희	남기순	오관영	임미선	홍장표	김창현	신희정
정진교	차진구	허해녕	김상기	김찬수	박희식	오모현	이영선	정용주	황재영(주)고생	김민수	민경록	신한미	이수행	장점숙	한창석	이옥기	김민	남양숙	오남숙	임현규	황영순	김한일	심재식
정춘희	차창호	현지훈	김선일	김철민	반영덕	오승택	이영수	정원모	한살림	김백규	박관우	심재광	이승호	장점오	한풍교	이용호	김병재	남정애	오은석	장동근	김햇님	안경모	
정치금	천병훈	홍경자	김선철	김철수	방대식	오윤택	이영순	정윤희	한상민	김동균	박동선	심현자	이영인	장현주	허성균	이종철	김복희	도원중	오정순	장동일	양평경실련	김현진	안영일
정래영	천상수	홍봉선	김성권	김철환	변성수	오홍월	이우영	정은희	한성희	김석진	박성대	안혜영	이영재	정계화	허윤범	이천오	김상혁	류영숙	오진호	장미진	김호수	안은경	
정태효	천용욱	홍일표	김성근	김춘식	변인미	원은주	이운연	정진용	한정숙	김성연	박승원	양우혁	이영주	정수진	허헌태	장동식	김석용	문강섭	오현주	정명숙	강대우	김후승	안정희
정하윤	천정호	황국자	김성미	김충남	서영기	유성봉	이은희	정흥기	함국기	김시영	박승자	양재철	이용욱	정순혜	홍사준	장문석	김성봉	문연숙	오현주	정세진	강병국	나진석	안태희
정한성	천현수	황범하	김성욱	김태영	서은진	유영민	이인숙	조광덕	함준식	김영기	박연순	양진하	이용호	정양훈	홍영호	정순관	김세원	민병권	왕은희	정승현	강신우	노국환	여현정
정해균	초의수	황보승희	김성율	김형걸	석명환	유영창	이재선	조영수	허우린	김영래	박완기	염규용	이운창	정원제	홍중수	정은희	김송철	박경용	원미정	정안철	강원정	류효웅	염충
정해명	최남연	황영식	김수자	김형기	선영복	유중완	이재정	조성열	홍련암	김영태	박용환	예인기	이원욱	정대정	황경희	조남훈	김영림	박경중	윤명숙	정연주	고봉철	박기두	오경아
제미경	최달웅	황인	김수정	김호준	소문섭	유주희	이재홍	조현국	홍명관	김완동	박원호	오동석	이원재	조경두	황대호	주지은	김영숙	박경태	윤상민	정용기	고혜란	박민기	오성탁
조명래	최민식	황인구	김순복	김희근	손병섭	유혜정	이종섭	주대하	홍인숙	김용석	박윤환	오동욱	이윤규	조병모	황민식	한지은	김영애	박금자	윤성웅	정은수	구민진	박석두	유기용
조명제	최병근		김순봉	김희정	손재복	윤광훈	이종식	주영래	홍진희	김용일	박은호	오세환	이의복	조석환	황성우	현고(임승남)	김영희	박동신	이갑순	정은식	권수연	박수경	유남숙
조민주	최보규	속초경실련	김승길	남상진	송경희	윤규식	이종식	주용현	홍해웅	김용철	박익중	오완석	이재득	조승백	황용원	홍상우	김옥경	박상호	이강숙	정은혜	권오병	박수형	유상진
조삼현	최선아		김승숙	노금희	송제철	윤기순	이주연	진장수	황보해웅	김웅	박재관	오일용	이재문	조영춘	황지숙	황금영	김옥수	박성진	이경란	정이진	김경덕	박애경	유선영
조상희	최성관	(주)강원으로	김승철	동병희	송종철	윤신남	이종길	진형배	황시영	김은하	박재순	오지현	이재혁	조은석	황의병	김윤재	박승렬	이경석	정정순	김경수	박옥경	유영표	
조수희	최수영	강동우	김시형	라용일	신대섭	윤재훈	이진여	천성미	황영필	김인석	박정화	오해경	이정원	조형훈	순천경실련	황인웅(순천경실련)	김윤희	박은호	이경진	정주호	김경희	박윤숙	윤경일
조양래	최승환	강미심	김연미	문제용	신선익	윤재희	이진형	천성필		김재기	박제현	우양미	이정하	주광애			김은주	박정희	이근미	정진욱	김광윤	박장수	윤덕규
조영규	최원석	강석태	김영석	민현정	신영근	윤정은	이철	최관식	수원경실련	김재성	박준배	유병욱	이종령	주영훈	강철호	안산경실련	김정란	박준연	이미숙	정철욱	김대우	박태원	윤성미
조용규	최원용	강신길	김영식	박경미	신재민	윤준	이태열	최근석		김정욱	박진순	유상태	이종만	지영호	김미정		김정숙	박태순	이민근	제종길	김덕현	박현일	윤수영
조용언	최은주	고영진	김영아	박경심	신종출	이건욱	이필선	최길순	(주)영원건설 - 최영욱	김종석	박태경	유재성	이종주	진대은	김선명	강경호	김제동	박해부	이벽희	조경래	김동운	방민경	윤숙자



윤정원	정하성	권진구	홍춘식	김광인	김용태	마석홍	박창근	신종욱	유재경	이선정	이충환	정윤희	최병탁	허림	권남구	김시철	남지승	배승휘	여승철	이영권	전영진	최성진	김수환	
윤종대	정혜경	김동식		김금녀	김우재	마세진	박창렬	신철승	유재춘	이상규	이학수	정은영	최복순	허범석	권대현	김연옥	남창섭	배철현	오경환	이용우	전용성	최인용	김용권	
윤형로	조경송	김동재	<b>이천여주경실련</b>	김기석	김운경	마애진	박태문	신해진	유혜란	이성훈	이한표	정은희	최상동	허수행	권미정	김연옥	남홍우	백동수	오광민	이용준	전준권	최일동	김용휘	
이경우	조소연	김미순		김기열	김용제	목현실	박태문	심관보	윤광석	이순창	이해철	정인우	최성원	허임범	권오경	김영구	노국진	백민섭	오월명	이원구	정기호	최재혁	김장기	
이그루	조재국	김성춘	강경모	김기은	김은이	문미자	박형국	심규대	윤남선	이승남	이현숙	정일구	최옥명	허임범	권오연	김영국	노승환	변성준	오원선	이의재	정낙식	최정자	김종원	
이길한	조춘선	김숙자	강석립	김기태	김은하	문승욱	박홍재	심형모	윤남용	이양순	이현숙	정정순	최용철	허준환	권육한	김영수	도영운수(주)	변태수	유동현	이일희	정두용	최정철	김주희	
이대형	조항욱	김영표	강신욱	김길홍	김은희	문연래	배경희	안병운	윤수영	이영우	이현호	정춘화	최운용	현주섭	권정호	김영옥	도지성	새만민안학협(주)	유진성	이재학	정미경	최준혁	김판용	
이동연	조현주	김정선	강영애	김대측	김은희	민승례	배정수	안봉섭	윤수영	이영재	이현희	정하근	최은실	홍경아	김갑봉	김영준	류병희	서경옥	유홍성	이정림	정석환	최찬용	김형식	
이동준	조효미	김종구	강정순	김두환	김의섭	박경룡	배중열	안신실	윤준호	이영현	이호돌	제영기	최인근	홍성동	김경태	김옥산	류재홍	서부길	윤관욱	이정윤	정선오	최해자	라형연	
이명규	지은숙	김현태	강창영	김미혜	김인기	박경미	변영구	안재영	윤태범	이영훈	이호영	조경국	최인식	홍원표	김경호	김용구	명선목	서용성	윤대기	이종일	정승연	한기남	박규만	
이명춘	진량규	박병규	고경애	김병기	김재임	박기환	변정해	안정민	윤태범	이옥희	이호일	조계만	최재화	홍은하	김계원	김용미	명창준	서원경	윤동구	이주영	정영중	한만승	박병진	
이미순	채 현	박성현	고윤지	김병수	김재홍	박영순	변정해	안창호	윤향숙	이용근	이훈	조길문	최정관	홍종민	김관호	김용민	목동훈	서주선	윤명철	이주용	정은식	한창원	박복희	
이상건	채풍목	박숙희	고인정	김봉덕	김정범	박명철	부태길	안철한	윤혜숙	이용만	임명원	조남술	최정숙	황경애	김광업	김우경	문동현	서태원	윤미선	이준한	정재영	함지현	박상민	
이선희	천귀선	배선주	공미선	김상실	김정수	박병건	빈종진	안형동	윤희태	이용연	임선미	조병돈	최정화	황규문	김광호	김원화	문상범	서해안	윤지외	이진준	정재윤	함창학	박양림	
이수진	최갑주	서영남	구경혜	김선우	김정찬	박병대	빈종진	양정분	은종원	이우정	임성규	조생남	최종	황규문	김근영	김윤태	민근홍	성기건	윤호	이찬우	정지은	허도병	박효민	
이승용	최두영	서호영	구준모	김선일	김종복	박상옥	사단법인에이트협임	양희진	이강문	이운용	임성식	조용필	최종	황인동	김남돈	김은경	박경호	성덕규	윤희정	이창숙	정진오	허우범	성치원	
이연이	최석운	심경택	구지은	김선희	김종원	박상용	서성원	엄기홍	이강수	이윤숙	임승한	조은미	최종악	황인재	김대중	김은영	박명희	성용원	윤희택	이창훈	정창훈	허주형	송약용	
이연호	최성범	심재수	권광일	김선희	김지혜	박상임	서원교	엄태희	이경수	이은자	임은혁	조정래	최춘봉	황현숙	김도영	김용철	박상찬	손병욱	이강훈	이철준	정철	허창희	심동희	
이용성	최소영	안성용	권순원	김성국	김진영	박상천	서은숙	엄화용	이경호	이의성	임철만	조정숙	최현희		김동우	김인수	박상희	손장원	이경우	이충우	정희윤	홍기석	안수현	
이의협	최영식	오경섭	권순원	김성국	김진용	박상철	서재호	여재혁	이광석	이익재	임현권	조종성	하맹수	<b>인천경실련</b>	김동호	김재식	박석민	송경희	이귀복	이한용	조광희	홍욱표	안정훈	
이자형	최영준	오승석	권영미	김성길	김진창	박선규	서정순	여한수	이광세	이재범	임혁빈	조철현	하태길		김두영	김재영	박선홍	송문성	이기태	이행숙	조동암	홍인식	양영희	
이정숙	최창규	윤주현	권영배	김성애	김창균	박선영	서희숙	오근철	이광윤	이재용	장경자	조춘순	하헌홍	(주)디씨알이	김락기	김종길	박성인	송원덕	이길성	이현경	조영희	황규철	양창훈	
이종인	하보균	이식	권영진	김성완	김창수	박성희	성주영	오영환	이광재	이재학	장교환	조택선	한국전력	(주)진영이앤지-최준욱	김명석	김중욱	박수영	송인선	이다빈	이현석	조용철	황덕성	엄상섭	
이지연	허부영	이유형	권영훈	김성재	김춘자	박수자	성희연	오병재	이광호	이정길	장영란	조택선	한덕이	(주)한성라인	김명제	김중호	박순옥	송태영	이도형	이현준	조용화	황석광	오상현	
이지은	홍성원	이철	권오섭	김세동	김태진	박양래	송경은	오석호	이기훈	이정숙	장왕명	조한영	한덕이	강경하	김무룡	김중화	박시우	신병철	이도희	이형구	조지영	황수연	유창엽	
이철규	홍성현	이평호	권오주	김수동	김학경	박옥선	송영득	오성순	이길수	이정형	장원섭	주상운	한돈집	강덕우	김미경	김준우	박신숙	신영은	이동기	이형수	조현경	황용선	윤영수	
이태환	홍승희	임호상	권혁봉	김숙현	김학재	박인	송영득	오성용	이길윤	이종승	장원주	주상운	한만준	강명선	김미영	김진영	박옥희	신은철	이루다	이후삼	조현준	황재각	윤철용	
임승기	황규영	장준배	권혁왕	김순업	김학훈	박인오	송이식	오형선	이대현	이종원	장재훈	지소연	한순택	강명수	김병우	김진희	박용해	신종한	이리라	임병구	지석	황재우	윤태영	
임진택	황순찬	정대훈	기보중	김순업	김현미	박일엽	송정호	우근배	이명신	이종한	전상진	지정철	한영순	강상근	김병철	김창선	박윤수	심연삼	이린우	임승관	진혁화	차경열	<b>전주경실련</b>	은영주
장승희	황현주	정승환	김 준	김연희	김현숙	박재선	송창신	우순애	이미희	이주윤	전성호	지효숙	한영옥	강석	김봉수	김창우	박재윤	심정순	이문의	임준택	차경열	<b>전주경실련</b>	은용우	
장영달		정정식	김강산	김영근	김형식	박재우	신계영	우순희	이박우	이준호	전영석	진선중	한은상	강석철	김상길	김태호	박준용	심현창	이범열	임재훈	차광윤		이민호	
전승희	<b>여수경실련</b>	정주현	김경건	김영숙	김호열	박전희	신덕선	우종만	이백선	이종재	정병관	차준은	한은상	강옥엽	김상섭	김태훈	박진석	새만민안학협(주)	이병기	임한택	차동열	강원균	이보향	
전재은		정차섭	김경률	김영자	김홍태	박전희	신동신	우현녀	이복수	이진관	정선옥	채봉수	한정민	강정호	김상열	김하운	박찬화	안동찬	이병철	임현준	차득기	강유정	이선미	
전재현	강규호	정지훈	김경립	김영자	남기태	박정하	신동윤	원경희	이부경	이진혁	정성기	천기영	한정현	강태경	김선홍	김현식	박한정	안병준	이상동	임희숙	최광용	강창수	이승현	
전종덕	강성훈	제성영	김경자	김영준	남용대	박정화	신동천	원중수	이상년	이찬우	정순현	천병기	한준학	고덕봉	김설	김희연	박현숙	안재균	이상영	임희진	최광은	강호수	이영식	
정남선	강용원	제윤경	김경중	김영춘	노필원	박종구	신두임	원중순	이상원	이창규	정승수	천재영	한준호	고재성	김성근	나영우	박형수	안희섭	이상진	장일진	최금행	곽기구	이정춘	
정동균	고용국	조현혁	김경화	김예론	무래유리창진사거리점	박종오	신영호	유경윤	이상태	이창수	정용희	최근우	한준희	고정규	김성수	나종팔	박홍열	양광범	이상훈	장정민	최두영	국승철	이재윤	
정연준	공성식	천상국	김광수	김옥자	류시근	박종옥	신원재	유상열	이상혁	이창수	정욱형	최대규	한희자	공규현	김수자	나종훈	박홍철	양의만	이성한	장조영	최병길	권미경	이점수	
정영수	권동재	한병세	김광수	김영곤	마상호	박준모	신은순	유상희	이석환	이천수	정유리	최동규	함연자	구자길	김승남	남봉현	방수환	양희석	이애경	전동춘	최상희	김만식	이정	
정주영	권인홍	한해광	김광식	김용섭	마석홍	박창근	신종욱	유승열	이선	이춘석	정윤지	최병주	함연자	권경자	김승희	남세종	배성수	엄연주	이연숙	전성식	최성원	김병석	이현희	



임규삼	박영민	김봉철	양우선	김미수	서상욱	정미영	강호문	김교선	김수환	김정초	김희수	맹성주	박종선	서준철	신영창	염은식	유영경	이길환	이은숙	이한례	장선배	정재량	주재현
임성진	송민수	김봉희	오승용	김봉미	서현숙	정병용	강호승	김국환	김숙자	김종구	김희숙	맹현숙	박종을	서효석	신영희	오경아	유영숙	이대응	이인우	이한훈	장영건	정준영	주창백
장석재	이광호	김석	오영익	김상관	소삼영	정병인	경준용	김규설	김승효	김종기	김희식	명정희	박종혁	석명용	신옥희	오경옥	유영아	이동로	이일만	이해승	장재봉	정지성	지동규
전기환	이상길	김선호	오정훈	김상철	송용완	정성진	고금순	김규원	김애영	김종철	나채경	문성오	박종희	선종열	신용재	오국진	유응모	이동진	이일우	이항숙	장홍원	정지영	지유석
정구영	이성실	김성수	유덕현	김세곤	신동현	정진선	고상돈	김기영	김양식	김종태	남기상	문종극	박지영	선지연	신철영	오명진	유재일	이두영	이장희	이현수	전광호	정진아	진종현
정세윤	이용관	김성준	유두석	김소당	안주형	정치화	고영구	김길후	김연식	김종태	남기현	문희창	박진우	설경철	신태경	오미정	유창범	이만형	이재덕	이현식	전금식	정진원	차은녀
정태원	전영렬	김세검	이성호	김연	양경모	정하진	고영재	김남진	김영근	김주복	남성욱	민경억	박철규	성기남	신해운	오병건	유철호	이만희	이재숙	이현주	전길자	정진하	차인용
조선환	한태석	김수연	이숙희	김용진	양승조	조미경	공공디자인이즘	김대광	김영란	김준경	남성욱	민광기	박철석	성창기	신현규	오상록	유행열	이명순	이재영	이형각	전년규	정찬영	채희관
조영범		김승필	임숙자	김재원	오수균	조영주	곽규은	김대중	김영란	김준년	남연심	민선희	박철완	성환용	신현식	오석승	유현덕	이명호	이재영	이형우	전동기	정철	청주산업디자인공단
조찬완	<b>제주경실련</b>	김신순	임정현	김종문	오승화	조하심	곽나현	김동수	김영민	김준수	남윤빈	민승기	박해순	소순창	신희숙	오세란	유환철	이명훈	이재원	이혜정	전병선	정홍선	청주상공회의소
주재호		김양보	장원석	김중우	오인철	주진혁	곽덕신	김동암	김영배	김준태	남중순	민청식	박현순	손세원	심규석	오수희	육미선	이미경	이재원	이호상	전윤철	정태진	청주상공회의소
진정현	강경희	김영희	정상철	김진국	유영길	최경식	곽승호	김동욱	김영식	김지연	네모토 마사쓰구	박관주	박형배	손윤희	심상학	오연경	육종길	이미순	이재은	이화련	전용표	정희승	청주인강생각연구소
채주석	강봉석	김용범	조문수	김진태	유진영	최경영	구남휘	김동일	김영재	김진철	노근호	박광수	박호표	손정훈	심수영	오영미	윤건영	이민영	이재춘	이호숙	전우석	조경주	청주전통시장연합회
천상덕	강승환	김우준	채호진	김철수	윤권중	최석남	구안서	김동진	김영태	김창석	노만균	박금순	박희분	손호진	심영미	오영애	윤관수	이범석	이재현	임건철	전창해	조경주	최각규
최낙용	강예남	김원규	한남석	김태명	윤일규	최신수	권경미	김동형	김영환	김천식	노재량	박기환	박희자	손희준	심재원	오영필	윤기희	이병관	이정규	임근수	전희택	조규완	최경호
최동성	강인창	김익태	한윤환	김행조	윤정섭	최정은	권기승	김두호	김영환	김철	노진호	박남순	반영운	송광희	씨투넷(주)	오윤주	윤미정	이병호	이정석	임기중	정길재	조규호	최명섭
최문희	강정임	김인영	허정아	김혜영	윤종임	하중률	권미경	김말숙	김영희	김춘희	대신정기(해물자동차주)	박문희	반주현	송선호	안병대	오재만	윤병선	이복순	이정수	임동현	정란희	조동순	최상범
최수진	강지용	김정수	현경호	김홍철	이경주	한문식	권성안	김영수	김원희	김태성	대정건설(주)	박미애	배병기	송은숙	안영숙	오종영	윤병희	이상규	이정아	임미애	정문섭	조동욱	최상영
최오일	강창균	김중훈	현미영	김효실	이계환	한형규	권수복	김영자	김용규	김태성	도경민	박미영	배용환	송의천	안장현	오준영	윤석위	이상식	이정협	임병락	정미화	조상	최상희
최정일	강대운	김창기	현종철	나이란	이명근	허종일	권영기	김문욱	김용덕	김태준	도선봉	박범혁	백미경	송일근	안종태	오창민	윤송현	이상종	이종수	임성진	정병숙	조상현	최성희
최종렬	고광희	김창연	현창석	내일시스템(주)	이병덕	홍영식	권오건	김미라	김용석	김태희	도승기	박석현	백승협	송재경	안창만	오태경	윤정수	이석구	이종실	임성총	정상섭	조성구	최영중
최진희	고병기	김철수	홍기홍	노덕우	이상일	황종현	권오식	김미숙	김용태	김평환	두깨비살림농조합	박성순	법무법인 주성	송재구	안창현	오태진	윤진현	이석희	이종원	임승빈	정상신	조성오	최우식
한상호	고봉수	문건식	홍성화	노순식	이상춘	황찬순	권오은	김민호	김용학	김필제	디자인포커스	박성호	변광섭	송재봉	안태희	오훈영	윤찬열	이선미	이종윤	임용현	정상완	조수중	최윤침
홍순필	고상봉	박미현		류임상	이서영	권태성	김병우	김용규	김학구	라운애		박세웅	변만수	송태성	양계인	오희	윤태한	이선순	이종한	임은정	정성래	조승연	최원호
황병해	고석건	박삼미	<b>천안아산경실련</b>	류지현	이선열	<b>청주경실련</b>	기경희	김병의	김원식	김학민	류규식	박연수	변민수	송태화	양기정	우상동	윤한식	이선우	이주봉	임일수	정성희	조영화	최윤정
	고석봉	박승훈		맹창호	이수현		김갑용	김봉주	김유호	김학실	류근모	박영미	변상호	송혜근	양미선	우정영	윤현우	이수복	이주선	임재경	정수창	조용숙	최은실
<b>정읍경실련</b>	고성봉	박재완	강민숙	명진아	이순곤	(주)평성엔지니어링	김강일	김상구	김윤모	김한솔	류근윤	박영미	변성민	송호현	양승주	우정순	윤호영	이수영	이주형	임재규	정순배	조원주	최재일
	고영수	변성언	강용봉	박미경	이승열	(주)세일	김건도	김상수	김은욱	김현상	류덕환	박영순	변은영	신경아	양원철	원광희	이가빈	이수한	이준수	임종승	정승희	조윤희	최종문
강창조	고영식	변정철	강은선	박민숙	이원자	(주)중부컴퍼니	김건일	김선영	김응철	김현주	류연욱	박용연	변의수	신국희	양찬섭	유경훈	이건철	이순남	이준희	임지민	정연경	조은애	최중예
고광호	고정훈	부상원	강인영	박민자	이점순	강대성	김경애	김선희	김인숙	김현진	류용걸	박은경	변장섭	신규식	엄경출	유광식	이경수	이순호	이종섭	임차남	정연주	조을선	최종익
고세창	고태식	부윤삼	강태윤	박복연	이종필	강민오	김경자	김성민	김인자	김형규	류우열	박익규	변종윤	신동선	에듀크리안트	유국렬	이경순	이승배	이종현	임한빈	정영래	조일원	최진욱
김용철	김강문	송대영	강희두	박상면	이종호	강병용	김경자	김성수	김일경	김형우	류재욱	박인성	봉원진	신동예	연구순	유근수	이경희	이승준	이종훈	임학수	정영섭	조정식	최진원
김은정	김경용	송석언	고영술	박수석	이철호	강병호	김경호	김성식	김재복	김형창	류재형	박인숙	봉윤근	신동호	연구용	유미숙	이광식	이연욱	이지숙	임현경	정영희	조종호	최충진
김을수	김광섭	송순	구자형	박종갑	임승안	강석형	김계욱	김성중	김재숙	김호숙	류지봉	박인자	서건석	신명섭	연방희	유민상	이광용	이영로	이지영	임혜숙	정우영	조진희	최태호
김일중	김남혁	송승호	금명기	박종복	장기수	강성래	김관식	김성천	김재원	김호일	류진호	박재경	서길용	신명수	연영규	유민채	이광희	이영숙	이지영	임희영	정은경	조항전	최현숙
김택술	김동욱	신용현	김경은	박종선	장원철	강승구	김광남	김성호	김재춘	김홍구	류찬걸	박재관	서미화	신명숙	연영태	유선우	이귀숙	이영진	이찬호	장경석	정은희	조형규	최형도
김현	김동진	안영철	김기태	박태서	장재식	강은희	김광복	김성희	김재학	김홍성	류학천	박재익	서연숙	신범식	연인하	유성훈	이귀형	이영희	이창록	장남운	정인수	조혜경	최호균
문성대	김동훈	양문석	김길년	박현희	전승래	강진성	김광성	김승일	김정문	김한국	류현숙	박정환	서완석	신성일	연지민	유순영	이규선	이옥인	이철중	장동대	정일기	주서택	충북지역개발회
문정수	김명준	양봉석	김문수	백우현	전종한	강태재	김광직	김수열	김정웅	김황래	리드산업개발(주)	박종관	서용원	신승주	연철출	유승덕	이기정	이유정	이철희	장병순	정일택	주식회사(주)대원종합에너지서비스	
박래수	김봉석	양시경	김미경	북아영	정구봉	강현구	김광희	김수정	김정일	김효일	미재광	박종룡	서윤고숙(주)	신연관	염우	유시승	이길재	이윤범	이학철	장병희	정장영	주재구	표한홍

풍경설	한은례	현진	황미화	길정숙	김한택	방명열	신혜숙	이관행	이희창	조성모	허장현
하옥란	한인섭	형미희	황선건	김광배	남형우	방수미	안호춘	이복연	임재선	조성자	허종영
하재성	한정현	홍강희	황성주	김남철	박경철	변용환	양태식	이상섭	전규호	진장철	황덕호
하태종	한종설	홍성학	황종빈	김대영	박대진	변차용	윤준형	이상철	전근우	최영진	황해숙
한범덕	함명옥	홍성학	황희연	김석중	박도수	변지량	유재원	이석원	전동준	최희수	
한상화	함종철	홍승표		김영준	박동운	석영기	윤장혁	이승준	전만식	춘천상공회의소	
한승환	허석렬	홍우표	춘천경실련	김용식	박미현	손현기	윤재경	이원규	전성휘	하상준	
한연수	허성만	홍응표		김정현	박상규	손홍주	윤재선	이은영	전호성	한희민	
한영선	허영	황경수	고태규	김진상	박정근	송창근	윤진현	이인섭	정의성	함태성	
한원영	현상주	황락훈	권용범	김찬중	박형일	신선철	윤학로	이종민	정휘돈	허영준	

###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02-741-8566	윤순철	사회정책팀	02-3673-2145	팀장 : 최예지, 간사 : 장혜승
기획교육팀	02-766-5626	팀장 : 김한기, 간사 : 최윤석	국제팀	02-766-5623	간사 : 정호철
회원팀	02-766-5627	팀장 : 채준하, 간사 : 윤은주	부동산국책감시팀	02-3673-2146	팀장 : 김성달, 부장 : 최승섭, 간사 : 장성현
홍보팀	02-766-5628	간사 : 유애지, 허재필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4	팀장 : 권오인
경제정책팀	02-3673-2143	팀장 : 권오인 간사 : 오세형, 이성운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팀장 : 남은경, 간사 : 김정훈
정치사법팀	02-3673-2141	팀장 : 김삼수, 간사 : 정택수	시민권익센터	02-766-5624	팀장 : 윤철한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간사 : 조성훈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팀장 : 윤철한, 간사 : 정택수
			월간 경실련	02-766-5627	이사 : 음유정, 김용재

###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충청권		
광역시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간사 : 이수희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 최윤정 국장 : 이병관, 유영아 간사 : 김미진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 조광현, 국장 : 최은영, 간사 : 박은영	경상권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 이광진, 국장 : 서해림	거제경실련	055-637-9451	간사 : 배동주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 이훈진, 부장 : 윤정선, 팀장 : 배성훈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 조근래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 김승원, 국장 : 김성아, 팀장 : 이경진	전라·제주권		
경기·강원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국장 : 이상휘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여수경실련	061-643-2110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 허정호, 부장 : 최미영, 간사 : 김정숙	목포경실련	061-283-4571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 서재숙
수원경실련	031-253-2266	국장 : 유병욱, 간사 : 문은정	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 최수진, 간사 : 고동우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 고선영	정읍경실련	063-536-6225	국장 : 김은정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 이종준, 간사 : 황규숙	제주경실련	064-726-2530	간사 : 김신숙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 추상운, 간사 : 변정혜			
양평경실련	031-772-2091	국장 : 여현정, 간사 : 김은미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 심한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 김경석, 부장 : 김미정			
춘천경실련	033-636-6631	국장 : 권용범, 간사 : 오연옥			